

200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 · 중간 무역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rade
and Development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련총

한 · 중간 무역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rade
and Development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2008 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왕 련 총

한 · 중간 무역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명 호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 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왕 련 충

왕련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경 상 대학교 교수 박 노 경

위 원 경 상 대학교 교수 전 의 천

위 원 경 상 대학교 교수 김 명 호

2007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2

제 2 장 한·중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3

제 1 절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3
1. 중국의 무역관리정책 및 제도. 3
2. 중국의 투자정책. 15
제 2 절 한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장벽. 18
1. 한국의 무역정책 및 해외투자 정책 18
2. 한국의 무역장벽. 20
3. 한국의 투자장벽 24

제 3 장 한·중 교역 구조 및 현황 25

제 1 절 한·중 교역현황 25
1. 한·중 교역 변화 및 현황 25
2. 한·중 교역구조 분석 26
제 2 절 한·중 수입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분석. 36

1.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분석	36
2.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분석	40
3. 시사점	44
제 3 절 한·중 간 무역의 급성장 원인 분석	45
1. 1992-2004년 한·중 무역액	45
2. 한·중 무역액 급증의 주요인	46
3. 한·중 무역에 잠재한 최대 문제	48
4. 향후 한·중 무역의 발전추세	49
제 4 장 한·중 교역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51
제 1 절 한·중 교역의 문제점	51
1. 원부자재 대 중국 수출 감소	51
2. 중국 농산물 수입 문제	51
제 2 절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	52
1. 다양한 마케팅	52
2. 유통 분야 관심 증대	53
3. 대 중국 무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	53
4. 한·중 간 무역 확대	54
5. 투자 현황 및 동향	56
6. 대 중국 투자협력 강화	57
제 3 절 향후 전망	59
1. 한·중 투자전망	59
2. 한국 기업의 투자 전망	62
3. 대 중국 무역 흑자에 기여	65

4. 해외 시장 확보	66
5.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국에 의한 추월	66
6.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전망	67
제 5 장 결 론	72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3-1> 한·중 무역규모 추이	26
<표3-2>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	28
<표3-3> 한국의 교역대상국별 수출구조(2005년 기준)	28
<표3-4>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과 중국의 대한 투자용 설비 수입	29
<표3-5>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분포	30
<표3-6> 가공단계별 대 중국 무역수지	31
<표3-7> 주요 중간재 품목별 대중국 무역 수지	32
<표3-8>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	33
<표3-9>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비중 추이	34
<표3-10> 가공단계별 대중 수입비중 추이	34
<표3-11> 기술수준별 수출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35
<표3-12> 주요 고기술 제품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	35
<표3-13> 한국의 나라별 수출의존도	36
<표3-14> 한국의 국가별 대외직접투자액 추이(실행 기준)	36
<표3-15> 중국의 對韓 수입액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37
<표3-16> 주요 국/지역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38
<표3-17> 가공단계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38
<표3-18> 기술수준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39
<표3-19> 한국산 제품의 중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 변화	40
<표3-20> 제조업 업종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산 시장점유율	40
<표3-21> 한국의 對中 수입액과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42
<표3-22> 주요 국/지역별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42
<표3-23> 가공단계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43
<표3-24> 주요 교역국의 가공단계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 변화	43
<표3-25> 기술수준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44
<표3-26>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변화	45
<표3-27> 제조업 업종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산 시장점유율	46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rade and Development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Wang Lianzhong

Advisor : Prof. Kim, Myung Ho,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the results of trade, problems, countermeasure and development policies existing between Korea and China by the recent statistical data.

Since 1970's, Korea's economy has embarked on a track of fast growth and completed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t is called Four Tigers in Asia together with Taiwan, H.K and Singapore. Korea was impacted by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Korean government has been adjusting its economic policies continuously, Its foreign trade volume reached USD 10.344 billion by 2002, ranking the 12th in the world.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 has been learning from its neighbor of Korea of the latter's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while boosting national economy and developing foreign trade.

Sinc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bilateral trade has steadily been increased, trade goods have been improved and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made rapid strides

through the joint-venture companies.

Since the two countries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developing rapidly. By the end of 2006, Korea became the fourth major trade partner of China and China the sixth largest trade partner of Korea. Additionally, Korea became the largest investor in China and Chinese investment in Korea also grows continuously.

During the period, there have been existed the trad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t has not made any affect on the trade development.

But Korea and China should make every effort to decrease the trade conflicts and trade unbalance of China. And further, Korea and China should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interchange and expand the joint venture. As the free area becomes visible in the two countries, the trade relations will be greatly developed. Especially, the recent big growth of China economy will necessitate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현황과 투자정책을 살펴본 후, 양국 간의 무역추이를 정리하여 현재 한국과 중국의 중단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 되었다. 수교 15년을 넘어선 한·중 관계는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1992년 64억에 불과한 무역규모¹⁾가 2006년에는 1,1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은 현재의 양국관계가 상호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극대화된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이나 문화·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경쟁적이거나 갈등적인 측면보다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 신장은 단순히 수출물량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의존도의 축소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경제가 급부상되고 있는 중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와 합작 등을 통한 선진 기술경쟁력을 획득하여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무역시장을 잠식하고 나아가 한국 국내시장으로의 침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이미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자본이 형성된 상태이며 또한 대외합작과 외자도입 등을 통해 기술력도 상당부분 확보된 단계이다. 즉 중국은 이미 한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국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 간 무역구조의 변화 및 투자현황을 통해서도 발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었던 양국관계

1) ※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액 증가 (연 평균 26% 증가)

·한국 통계 : 64억불(92년)→1,180억불(06년) : 18.4배 증가

·중국 통계 : 50억불(92년)→1,344억불(06년) : 26.9배 증가

의 밀월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중국에 대한 수출채산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거래선 확보를 위한 한·중 양국의 활성화 방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정책과 교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둘째, 한·중 양국의 교역현황에 대해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세밀히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중 양국의 교역추이를 정리하여 교역시의 문제점과 수·출입 및 투자 현황 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수·출입 관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국 간의 투자·교역·경제협력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양국의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중국의 무역관리정책·제도 및 투자정책, 한국의 무역정책·제도 및 투자정책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 수교 전·후의 무역현황, 즉 경제협력 현황, 한·중 교역구조, 한·중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분석하고 투자 현황을 검토하여 한·중간 무역의 급성장 원인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종 현황은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간의 교역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교역확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중간의 향후 무역 전망을 해 보았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 · 중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

제 1 절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1. 중국의 무역관리정책 및 제도

가. 무역관리기구

중국의 무역관리체계는 중앙의 거시적인 관리 및 통제, 지방과 기타관리부문의 행정관리, 무역기업의 경영관리로 삼 분화 되어있다. 중앙의 무역전담부서인 대외경제무역부는 국무원 산하 조직으로 국가의 대외경제 및 무역에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시행을 비롯하여 무역계획 작성 및 지도, 무역기업의 경영관리 및 통제, 정부간의 무역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대외경제관계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간관리 단계인 지방의 대외무역위원회와 중앙의 기타 관련 부문의 역할은 분급 관리의 원칙에 따라 무역에 관련 각종 행정 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분급 관리의 원칙에 따라 무역에 관한 각종 행정 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무역경영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기업은 무역개혁에 의해 독립채산제, 손익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어 중국의 무역 관리는 점차 정부·기업 또는 행정·기업 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무역기업은 7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보면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무역기업, 지방 대외무역 관련 부서소속의 무역기업, 중앙정부의 각 공업부 직속의 무역기업, 직접 수출이 가능한 생산 기업, 공장·수출전문 연합기업, 공업무역 결합에 의한 무역기업, 생산 및 판매가 일원화된 대형기업 등이다.

나. 무역관리조직

중국은 무역제도개혁으로 기존의 엄격한 국가 통제 방식의 무역관리체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먼저 관리 및 경영측면에서 보면, 개혁 이전의 무역관리체제는 국가가 수립한 무역계획에 의해 대외무역부만 행정 관리를 담당하고 산하의 중앙전업총 공사가 직접적인 무역경영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는 무역자율

권이 지방과 기타 부문으로도 일부 이양되고 새로 설립된 많은 기업이 부분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무역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관리체제의 개혁이 국가통제에 의한 사회주의계획 무역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무역 개혁으로 국가 독점에 의한 국영무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방 및 각종 무역규제 조치에 의한 중앙의 관리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외개방 이후 많은 무역기업이 설립되어 무역 창구가 다양화되었지만 새로 설립된 무역 기업 중 일부 중외합작기업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전민소유제 또는 집체소유제의 기업임을 감안할 때 국영무역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역개혁은 사회주의 계획 무역체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무역기업의 경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무역계획은 국가의 무역 통제에 필요한 수단이자 국가 경제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무역체제 각 부분 계획은 상품유통계획, 재무계획, 상품운송계획, 기본건설계획, 노동임금계획, 무역전문 인력교육 계획으로 구성된다.

무역계획은 연간 경제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장기 및 단기 경제발전계획에 따라서 대외경제무역부가 국가계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의 승인 후 실행된다. 무역계획 작성 과정은 하급 단위인 모든 무역기업과 성·시·자치구의 대외무역위원회가 수입을 필요로 하는 상품 목록과 수출 가능한 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의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이를 조정하여 다시 하급 단위로 하달하며 하급 단위는 자체의 무역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연간무역계획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 개혁 이전 중국은 각종 무역활동을 모두 복잡한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그 계획을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균형과 시장조절의 중요한 작용을 무시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과 실체가 분리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며 무역기업의 활동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무역기업을 행정관리 부문에 예속되게 하였다.²⁾

중국은 무역계획 체제상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계획에 있어서 지령성 계획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도성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형으로 무역계획체제를 개혁하였다. 즉 무역계획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失大放小”³⁾의

2) 조갑제 “중국의 경제발전정책과 대중국교역증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논문집 1990년’, p37.

원칙에 따라 무역계획체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부문을 주로 개혁하는 것이다.

다. 수출입제도

WTO 가입 이전의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영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주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운용하였다. WTO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입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관세를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비관세 무역장벽도 완화하는 등 개방화를 지속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외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대외무역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무역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이 낮은 기업은 도태되게 하였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밀수, 자본도피, 위장 조세환급, 쿼터배정 허가증불법 매매, 위조 상품 교역, 브랜드 침해 등의 탈법, 위법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위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투자 진출 시 허가받은 생산 제품 및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제한적인 대외 무역권을 부여하였다. 외자 기업으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소매 등의 유통을 위해 별도의 법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다.

(1)수입관세

수입관세는 크게 보통세율,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의 4가지 중의 하나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최혜국세율보다 우대적인 성격의 협정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이 2006년 9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시행되어 기존 특혜관세가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7년 현재 9.8%이며,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

3) 큰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부문은 개방 활성화 한다.

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2007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07년 1월부로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2006년 1,600개 수출입세목을 조정함에 따라 2007년 수출입 세목은 총 7,647개에 달한다.

중국은 범용기계, 제련설비, 광산기계, 식품기계, 포장기계, 환경설비, 계측기기, 전자통신설비 등 192개 품목에 대한 자국기업의 설비 투자용 제품 수입관세 면제 폐지를 확대하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 이전에 인허가를 취득한 프로젝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중국세관은 새로운 가공무역단모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가공무역 계약 건마다 수입재료별로 등기수책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가공제품의 수출 후, 실제 완제품 수출수량과 원재료 사용량과의 관계, 잔존 폐기물과 잉여자재 등을 심사하고, 단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로 간주하여 관세와 수입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 면제 잠정규정’을 발표해 2007년 2월 1일부로 시행하여 11차 5개년 계획기간이 끝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국 내 생산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과학기술개발용품이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 수입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게 되었다.

(2) 수출관세

2006년 10월 중국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상품에 대한 잠정관세율조정통지’를 통관시키고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7년 수출세 인하 또는 신규부과 등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174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3)수입 제한

중국은 관세 외에도 수입 허가제 및 쿼터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수입을 규

제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오존층 파괴물질, 이종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 품목, 자동수입허가증 제도 등 3종류가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경우 기존의 3개 품목 83개 세목에서 1개 품목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였다. 화학무기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종사용물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 등 총 902개 세목에 대해 자동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허가증 발급기관은 상무부, 상무부 15개 항구 사무소, 30개 지방 정부, 14개 계획단열 도시 대외경제무역청이다. 2007년 중국 상무부는 '자동수입 허가관리화물품목'에 대한 조정을 거친 후, 강재와 프라스틱을 포함한 모두 329개 세목의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취소하고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매 건별로 수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입하고, 수입허가증은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며 최장 3개월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입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경우 6개월마다 상무부 산하수입 쿼터 관리국에 수입 계획을 통보하고 당국의 심사를 거쳐 벌크재 등을 수입할 수 있다. 현재 수입 쿼터 및 수입 허가증 등에 의한 수량 규제는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이나 WTO 가입 5년 후에도 전체 수입품의 2%인 150개 품목은 여전히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전망이다.

(4) 수입쿼터 관리

기계와 전자, 대형 플랜트 설비 및 기술 등 적정 수입은 필요하나 대량 수입시 국내 산업 및 외화 보유에 영향을 주는 상품, 원유, 석유제품, 양모, 양식, 비료, 농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상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 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최근 '위험'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한 안전검사와 환경보호 검사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직접적인 수입 규제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5) 수출 제한

중국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2004 수출 허가 품목’을 제정, 수출 물품을 5개 종류, 52품목으로 구분하여, 허가 품목에 속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할 지역 당국의 허가절차를 밟기 전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수출 허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화, 원유, 실크 등 41개 품목 375개 세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수출 쿼터입찰,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수출허가증 유효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건별로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 쿼타는 수입국 수량 제한에 의한 피동적인 관리와 자국제품 수출시장의 안정을 위한 자율적 관리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쿼터관리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상무부 또는 그 수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가공무역 보증금

1999년부터 가공무역(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중국에는 주로 임가공료 등의 경비만 지급)에 필요한 물품을 금지, 제한, 비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지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제한물품은 수입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관리하기 쉽지 않은 품목, 비제한 물품은 금지와 제한 물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으로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 보증과 예치가 불필요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다.

중국은 경유 등 자원소모성 제품, 동물성 모피 등 환경오염 제품, 일회용 컵, 랙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위주나 ‘2007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발표하고 4월 26일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구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 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금지 품목 105호, 63호, 82호에 이은 4번째 공고이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총 990개로 이중 수출 금지품목이 707개, 수입 금지품목이 222개, 수출입 금지품목이 122개이다. 이미 상무 주관부문의 비준을 취득한 가공무역인 경우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서 유효기간내에 취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기업은 2008년 4월 5일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관세제도

중국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개방정책을 관찰하고 수출증대, 불필요한 제품의 수입억제와 필수품 수입을 권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호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중국 관세행정의 책임 부서는 국무원 직속기구인 해관총서와 산하의 34개 세관 및 광동성 내 세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에 유일한 해관분서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은 국무원에서 담당하며, 세율조정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분기마다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관세세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국내의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또는 대외무역 부분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외적 상황, 상품의 용도, 국내의 유관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지면 관세율의 조정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진다.

관세관련주요법규로는 '중화 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 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혹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한다.

셋째,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 설비, 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한다.

넷째,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한다.

4) '중국국가정보', 대한무역진흥공사, 1996, p107.

여섯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면제한 다. 단,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몇몇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를 징수 한다.

중국은 현재 복합 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관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보다도 높은 보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1) 중국의 산업피해 구제법을

대외무역법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WTO 규범에 부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수출입 및 물자의 무역, 투자 및 합작, 서비스 무역 등 약 1,050여 개의 경제 관련 법규를 WTO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04년 4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총 8장 44조로 되어 있던 대외무역법이 총 11장 70조로 개정되었다.⁵⁾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은 대외무역권의 자유화, 상품과 기술수출입의 원칙적 자유화와 예외 규제,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대외무역조사 규정 신설, 반덤핑 규제 등 무역구제 완비, 법률적 책임의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⁶⁾ 특히 중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제7장 37조, 제8장 41조), 세이프가드(제3장 16-17조, 제4장 26-27조, 제7장 37조, 제8장 44조), 반보조금(제8장 43조)과 관련하여 WTO 규범을 준수하면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⁷⁾.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7장 41조에서 중국 이외의 상품이 덤핑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유입되어 중국 산업에 손해나 위협 요인이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제8장 44

5) [http://www.wto.org/THE_WTO/membership/members and observers/china](http://www.wto.org/THE_WTO/membership/members_and_observers/china).

6) 안재진, “최근 개정된 중국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 「상품학연구」 제23권 3호, 2005.p46.

7)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개정되기 전의 대외무역법에도 제정되어 있었음.

조에서 특정 제품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중국산업에 손해나 손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여 손해나 손해 위협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반덤핑 조례

중국은 덤핑과 관련하여 반덤핑조례를 제정 공포한 이후, WTO 가입 직전인 2001년 11월 반덤핑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WTO 가입 후인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⁸⁾ 반덤핑조례는 덤핑의 정의, 조사절차,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산업 피해의 결정, 인과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반덤핑법의 총괄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후 중국은 WTO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상세한 법률적 근거들을 마련하게 된다. 외경무부(이후 상무부로 통합)는 반덤핑조사샘플링규칙, 반덤핑관세환급규칙, 반덤핑조사입안규칙, 반덤핑연례재심규칙, 반덤핑조사정보공개규칙, 반덤핑가격협상규칙, 반덤핑질문서 조사 규칙(1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무위(이후 상무부로 통합)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칙을 제정하여 반덤핑 조사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게 된다.

이와 같이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WTO 가입 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례의 산업피해조사 부분은 WTO 반덤핑협정 제3조 1-7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의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례는 누적평가 부분을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누적평가 할 수 있다”고 단순 규정하여,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3항처럼 누적평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누적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례에서는 산업피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의 야기나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산업 설립의 실질적 장애를 야기할 경우”라고 원론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칙에

8) 하나로 되어있던 반덤핑규칙과 반보조금규칙을 2001년 11월 반덤핑규칙과 반보조금규칙으로 나누어 개정.

서는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진정한 이유를 결정할 때, “정확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각 경제지표와 그 요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덤핑 이외의 산업피해 요소를 덤핑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WTO 반덤핑 협정과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2004년 상반기까지 WTO 규정을 바탕으로 반덤핑관련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3) 세이프가드 조례

대외무역 구제제도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산업피해 구제제도이다. 세이프가드 관련법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제정되어 WTO 가입 후인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례는 총 5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청원자격, 조사신청, 조사기간, 조사방법, 세이프가드 조치사유, 세이프가드 조치의 결정 및 집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이프가드 조례를 제정하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산업피해유무의 결정과 관련하여 WTO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피해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심각한 피해(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clearly imminent threat of impairment)”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상무부는 2002년 2월 4일 세이프가드 입안 규칙과 세이프가드 공청회 규칙을 제정하고, 2002년 12월 13일에 세이프가드 대상범위 조정 규칙을 제정하여 그동안 세이프가드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WTO 협정준수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바.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중국의 외환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국가외환관리국이 환율설정 등 외환관리를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얻어 지정된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환거래는 일반적으로 외

환계획에 따라 행해지며 외환계획 가운데 대외무역, 대외차관, 대외원조와 관련된 계획은 대외무역 경제 합작부가 작성하고 다른 정부 각부의 외환예상은 재정부가 작성하게 된다. 1994년 이전까지 중국의 환율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친 뒤 1985년 외환조정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한율과 조절환율로 나누어지는 2중 환율제가 주로 채택되었다. 공정한율은 국가외환관리국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로 중국대부분의 무역 및 무역외거래는 이 환율에 의해 결정되었다. 조절환율은 특수한 외환시장이라 할 수 있는 외환조정시장에서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을 말한다.

1994년 1월 1일 기존의 2중 환율제가 폐지되고 단일환율제가 실시되고 있다. 1994년에 실시된 외환관리제도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환 결정방법 개선 및 은행 간 외환시장의 설립
- 외환수지의 집중매각제 실시 및 외환보유제도 폐지이다. 변경된 제도는 중국국내 기업의 외환획득 금액 중 일정부분 보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 및 기관은 향후 취득하는 전액을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국가지정은행에 매각하여야 한다.
- 외화매입제도의 개선이다. 국내외 사업 및 기업단위, 기관과 사회단체가 대외결제용에 대해 적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지정은 행에서 인민폐를 외환으로 환전하여 지불할 수 있다.
- 외환 지정은행의 준법경영 및 서비스능력 강화이다.
- 외채관리 강화, 외채상환기금 설치 및 국가대외신용도 제도이다. 단일 변동외환제의 전격 실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무역관리 방식을 저율관세와 환율 등의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부사정, 외환관리제도 개혁의 최종목표인 인민폐의 자유 태환(兌換)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는 먼저 외환 할당을 받은 다음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외환 할당을 배정하기에 앞서 은행이 제시된 수입계약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외환조작과 함께 수입규제에 한 수단이 되고 있다.⁹⁾

중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고정 환율 제도를 고수하면서, 자체 통화에 대한 엄

9) 진주현,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대 중국수출증진 장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1996년 8월, P27.9)

격한 통제를 유지하다가 2005년 7월에야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뿐 아니라 다른 통화까지 포함시키는 '통화 바스켓' 제도에 의해 거래되도록 허용했다.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라는 압력을 중국에 가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의 증가하는 무역 흑자는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2007년 3월말 현재 1조 2,020억 달러)하고 과도한 외환보유에 따른 통화팽창 → 물가상승 →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중 대부분(약70%)인 달러의 약세에 따른 자산 손실 우려 등으로 적극국내기관투자가(QDII1)제도, 국가외환 투자공사 설립, 중국기업의 M&A등 해외투자 장려, 저개발국에 대한 자원외교 등을 통해 국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무역수지 흑자가 1,775억 달러에 달하고, 2007년 들어서도 1/4분기 무역흑자 464억 달러, 경제성장률 11.1%, 3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3%, 3.0% 상승함에 따라 위안화 절상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위안화 절상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대미 달러화에 대한 일일 변동폭을 $\pm 0.3\%$ 에서 $\pm 0.5\%$ 로 $\pm 0.2\%$ 인상하였다.

2. 중국의 투자정책

가. 경제특구의 설치

중국은 자본 및 기술도입정책의 목적을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함에 따라 1979년 4월 외자도입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확정하고, 동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중외합작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80년 8월에는 시범적으로 연해지방인 광둥성의 深圳, 珠海, 汕頭를 경제특구로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복건성의 廈門에도 경제특구설치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수출자유지역(Free Trade Zone)과 대체로 유사하나 특구의 지리적 위치, 중국의 특수한 사회주의 경제제도, 구체적인 설립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정한 지역을 구획하여 대외개방을 하면서도 중국주권 관할 하에 있으며, 관세면제 등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여 여러 외국 및 화교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어 가공위탁, 보상무역 등을 전제로 합자경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내의 자본주의방식을 채택한 특수지역’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경제개발구의 설치

중국은 1979년 대외개방정책의 시행으로 해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이미 초보적인 경제개발의 국면은 타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상당히 완만한 편이었으므로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이 비록 ‘자원의 부족’ 이라는 약점은 있으나, 경제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므로 우선 ‘연해지역부터 부유케 하자’ 는 데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84년 4월 6일 연안지역도시 좌담회에서 상해시, 천진시 및 대련시, 진황도시, 연태시, 청도시, 련운강시 등 연안도시를 단계적으로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1985년 2월 주강삼각주경제개발구, 장강삼각주경제개발구도 설치되었다. 1988년 해남도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다. 상해포동의 개방

1990년 4월 중국정부는 포동 지구를 "포동신구"로 명명하고 경제특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포동 신구 중점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9월 포동 3개 개발구(륙가취 금융무역구, 금교 수출가공구 및 외고교 보세구)를 설립하고 1992년 6월 장강첨단기술 개발구를 설립하였다.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14기 대표대회에서 포동 개발을 통해 상해시를 국제적인 경제·금융·무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장강 유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여, 이는 상해를 용의 머리, 포동을 용의 여의주, 장강을 용의 몸통에 비유하여 상해와 포동을 중점 개발함으로써 그 여파가 용의 몸통을 통해 꼬리(사천성 등 내륙지역)까지 미치게 한다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라. 외상투자지도 방향 및 서부 대개발

1995년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대외무역경제부는 “지도 외상투자방향 규정”,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을 발표하였다. 1998년 재수정하고 2002년 다시 수정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항목은 "장려", "제한", "금지", "윤허" 4가지로 나누어진다. "장려"류는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 교통, 중요한 원자재 공업, 첨단신기술, 국내에 모자란 신설비, 신재료제조업, 수출제품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을 포함한다. "제한"류는 개발된 기술과 국가전문 경영 산업을 포함하고 "금지"류는 국가안전 관련된 군사 무기 생산 산업, 색정서비스, 환경이나 인체건강에 손해를 시키는 산업을 포함한다. 상기 3류외에 "윤허"산업이 있다. "장려"류와 "윤허"류는 국가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하여 대외우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제한"류는 국무원산하 부, 성, 직할시, 시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최근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고, 수출 제한 조치·반덤핑 제소 등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외국인투자에 따라 중국내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고정자산투자 과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M & A를 포함한 외국인투자 증가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 국내저축 축적이 증가하여 투자재원이 풍부해지고, 중국내 투자가 과잉되는 양상까지 보임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부가가치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내외국기업에 대해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쟁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국기업의 내부 잠재력을 배양하여 경제자립도 제고하고,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축소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2005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6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0.5%가 감소하여 6년 만에 감소하였고, 2006년 7월 말까지의 유입액 역시 3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의 축소는 세제혜택축소 및 세무조사강화, 외자 선별화정책, 외국기업의반독점 및 M&A 규제강화, 노사관계개선 등근로자 권익 보호 의무 강화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제 2 절 한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장벽

1. 한국의 무역정책 및 해외 투자 정책

가. 무역정책

수출진흥정책은 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한 비교우위체제의 확립, 수출기반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81년 9월에는 신규수출업체의 용자확대를 통해 수출기반을 확충시켰다. 수출지원제도 면에서는 1980년 1월의 환율현실화와 2월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채택으로 환율유동화를 시행하여 수출업체의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개선시키려고 하였다. 1982년 6월의 수출금리와 일반금리를 일원화시켜 수출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지양시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수출기반의 확충을 위해 1983년 5월의 중소기업 종합지원단 설치와 1985년 8월의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 금융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수출저변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1984년 3월의 수출산업 설비금융취급규정 신설을 통해 소재 및 부품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급변하는 통상여건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1985년 6월의 연계무역활용과 1986년 9월의 포괄수출 보험제도를 통해 공산권과의 교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7월의 대외무역법의 제정으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수출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에 시장평균 환율제도의 도입으로 대외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출업체의 체질개선을 유도하였다. 1988년 GATT총회 결의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시작된 이래 장장 8년이 경과한 1993년 말, 드디어 동 협상은 타결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전후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해온 GATT체제부터 새로운 WTO 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 1993년에는 외부 세계의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경제정책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대외무역법을 대폭 개정하여 종전의 무역업 허가증을 등록제

로 바꾸고 무역관련 각종 제도상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한국은 1959년 GATT에 가입하면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수입자유화정책은 1978년 2월에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단계별로 수행되었다. 제1차는 1978년 4월에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의 수입 자유화율은 64.9%로 이와 같은 단계별로 수입자유화정책은 1978년 9월에는 제2차, 1979년 1월에는 제3차, 1981년에는 제4차로 순차적으로 수입 자유화율이 74.7%로 실시되었는데, 1983년부터는 한국정부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따라 내수산업의 과보호를 축소하여 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한 국제경제력의 강화를 달성한다는 추진 하에 수입자유화는 더욱 확대 실시되었다. 따라서 1983년 1월에는 "1983년 이후 단계 수입자유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4월에는 기동 관세제의 도입을 통해 관세를 저관세율 체계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산업간 및 품목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였고, 8월에는 관세 개편 안을 확정하여 "1984-1988예시제"를 도입시행 하였다. 수입자유화율은 1984년에는 84.7%, 1985년에는 87.7%, 1986년에는 91.5%, 1987년에는 93.6%, 1988년에는 94.8%, 2001년 무역자유화율은 100%로 되었다.

나. 해외투자 정책

한국정부는 1993년 6월 외국인투자개방 5년 계획을 마련한 이래 외국인 투자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996년 12월 OECD 가입시에는 44개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개방계획을 제출하여 매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및 개방 시기를 발표해 왔다. 개방일정에 따라 육우사육업, 고기도매업, 뉴스제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 1999년 말 7개에서 4개로 축소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은 99.6%에 이르고 있다.¹⁰⁾

한편,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 도입된<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10) '2002주한외국업체디렉토리' 한국정보서적 2002, P15-20.

외국인투자촉진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에게 다양한 투자방법을 제공하고, 투자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술, 생명공학권 등 지적재산권의 현물출자와 주식교환방법에 의한 투자방법을 허용하였다.

둘째,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자가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임명절차를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말소 요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9.3.2제정된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외국인투자규모 및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원비율(수도원40%,비수도원50%)을 설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유치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국가지원분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2. 한국의 무역장벽

한국은 무역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볼 때 한국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아직도 여러 가지의 무역장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 관세 및 관세관리조치

2005년 한국의 평균관세는 8%이하이다. 그러나 일부 농산품 및 공업 제품의 실제 관세는 다른 공업화국가보다 훨씬 높다.

(1) 조정관세

1984년부터 한국은 조정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관세법>에 따르면 조정관세 부과라고 함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시장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품에 해를 끼치는 경우, 환경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한시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본 관세에 100%이내의 조정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도한 할당 외 관세율

한국은 일부 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할당외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관세율이 200% 이상에 달한다. 참깨의 할당 외 관세율은 무려 630%, 마늘은 360%, 녹두는 607.5%, 대추는 611.5%, 녹차는 513.6%에 달한다. 중국의 대부분 경쟁력 있는 농산품이 한국정부의 관세 쿼터관리범위에 포함되어 높은 할당외 관세율은 중국의 관련 상품의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3) 농산품 특별긴급관세

2004년 한국정부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을 수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녹두, 팥, 메밀, 대두, 땅콩, 인삼 등 45가지 농산품의 수입량이 최고로 1,067%의 농산품 특별긴급관세를 징수한다.

(4) 기타 관세

한국세관은 수입하는 "혼합제품"(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에 대한 세율을 주로 제품의 "주요성분" 심지어 "수입목적과 동기"에 의하여 분류한다. 이런 방법은 수입품에 불합리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게 한다.

나. 통관장벽

(1) 농산품 추출 검사율

2003년 7년부터 한국세관은 농산물 밀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핑계로 수입 농산품에 대한 추출 검사율을 대폭 올린다.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 추출 검사율은 3%~5%이지만 농산품에 대한 추출 검사율은 20%까지 높이고 냉동고추와 혼합조미료에 대해서는 100%의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중국관련 농산품의 통관시간을 연장시키고 거래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2) 통관 전 세액 심사제도

한국세관은 2000년부터 관세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 농산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농산품은 참깨, 들깨, 생강, 팔, 녹두, 땅콩, 대두, 양파, 보리, 고구마전분, 냉동고추, 냉동마늘, 절인 마늘, 신선한 마늘, 신선한 통마늘, 마른 마늘, 당근 등 18가지 품목으로 증가한다. 심사대상에 속하는 농산품은 통관 전 반드시 한국세관의 가격심사를 받아 관세탈루의 혐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세관은 이 심사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여, 거래계약과 지불방식 및 제품신고가격과 세관에서 통계한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여 수입자가 신고한 제품의 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판정가격이 합당한 제품에 대해서만 세관에서 통관을 시킨다. 그러나 한국세관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기준심사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하는 18가지 농산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이고 들깨, 냉동고추, 당근, 냉동마늘을 제외한 14가지 농산품은 모두 할당량 관리품목에 속한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통관시간을 연장시키고 중국 농산품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방해한다.

다. 기술성 무역장벽

한국기술표준관련기관은 한국 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중국제품이 한국시장에 진입하는 원가를 높이고 시장의 불확정성을 높인다.

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한국의 검사검역제도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중국 제품은 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등이다.

마. 무역구제조치

(1) 반덤핑 조치

2006년 말까지 한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는 37건으로 대부분이 반덤핑관세 징수 혹은 가격약속합의를 함으로써 사안을 마무리한다. 2005년 1월, 한국정부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리고 모든 중국기업에서 4.82%~23.08%의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것을 결정했다. 6월과 11월, 한국정부는 중국산 타일과 폴리에스테르 가공실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진행했다. 중국산 타일 반덤핑 사건은 5,866만 달러에 달해 최근 한국이 중국에 대해 벌인 가장 큰 한차례 반덤핑 조사로 기록된다. 2005년 11월 24일, 한국무역위원회의 1차 판결에 따르면 중국산 타일의 대한수출이 덤핑에 속하므로 7.25%~37.4%의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고급, 고가이면서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조사에서 제외할 것을 바라고 있다.

(2) 특수 보호와 방직품 특별 제한

한국은 현재까지 중국제품에 대한 특수보호와 방직품 특별제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것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6조에서 규정한 특수보호조사 및 중국 WTO 가입 공작조 보고서 242단에서 규정한 방직품 특수제한조사에 대한 권리를 조만간 포기하여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바. 정부 입찰

한국은 WTO ‘정부입찰협외’에 서명한 국가이다. 한국 정부가 농산물 수입 입찰을 할 때,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계약규정이 불합리하여 쉽게 수출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입찰에서 입찰기업은 입찰

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찰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 보증금을 공제한다. 한국은 입찰수입계약에서 농산물가격이 정한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면 선적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화물이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손상과 중량검사를 받고 그 어떤 사항에서 불합격일 경우 선적지에서의 검사가 합격이었던더라도 강제 반품할 수 있다. 이는 중국수출업체가 한국농수산물정부입찰에 참여하는 위험도를 높이고 중국 측에 불합리한 부담을 과중시킨다.

3. 한국의 투자장벽

가. 가투자 진입 장벽

한국은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외국에 자유로이 송금을 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 투자 경영 장벽

실업보험은 이중납부를 해야 한다. 한국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자본 기업은 한국 국적근로자의 고용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 근로자의 고용보험금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국적 근로자는 임시 파견으로서 이미 중국 국내에서 실업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이중 징수는 재한 중국자본 기업의 부담을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근로자도 한국에서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 법률은 재한 외자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국자본 기업의 중국 국적 직원은 이미 자국의 양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화인민 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양로보험 상호 면제에 관한 임시조치 협의”가 2003년 5월 23일부터 실시했다.

제 3 장 한 · 중 교역 구조 및 현황

제 1 절 한 · 중 교역 현황

1. 한 · 중 교역 변화 및 현황

1992년 한 · 중 수교이후 15주년이 지난 현재,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급속한 관계 증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 2006년 한 · 중 간 교역 1,180달러 달성

2006년 한 · 중 교역 액은 1,180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중국통계기준)한국의 대중 수출은 695억 달러(다음<표3-1>와 같이), 수입 485억 달러, 대 중국 무역수지209억 달러이다.

※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액 증가 (연 평균 26% 증가)

·한국 통계 : 64억불(92년)→1,180억불(06년) : 18.4배 증가

·중국 통계 : 50억불(92년)→1,344억불(06년) : 26.9배 증가

<표3-1> 한·중 무역규모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교역액	314.9억불	411.5억불	570.2억불	793.5억불	1005.6억불	1180.2억불
수 출	181.9억불	237.5억불	351.1억불	497.6억불	619.9억불	695억불
수 입	133.0억불	174.0억불	219.1억불	295.8억불	385.9억불	485억불
무역수지	48.9억불	63.5억불	132.0억불	201.8억불	232.7억불	209.0억불

출처 : 한국무역협회 11)

11) 한국무역협회, MT13단위 기준.

2006년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대중 교역액/한국의 교역액)은 18.4%로 전년대비 1.8%p 상승하였다. 대중 교역의존도에 보면 (92년)4.0% → (00년)9.4% → (04년)16.6% → (06년)18.4%이다. 대중수출의존도에 보면(92년)3.5% → (00년)10.7% → (04년)19.6% → (06년)21.8%이다. 2006년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의존도(대한 교역액/중국의 교역액)은 7.9%로 전년대비 0.1%p상승에 그쳤다. 대한 교역의존도에 보면 (92년)3.1% → (00년)6.0% → (04년)7.8% → (06년)7.9%이다. 대한 수입의존도에 보면 (92년)3.3% → (00년)10.3% → (04년)11.1% → (06년)11.6%이다.

2. 한·중 교역구조 분석

가.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2005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다음<표3-2>와 같이) 82%로 전년대비 2.3%p 상승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17.3%로 동 2.4%p 하락했다.(대중 수출상품 구성(2005년):일차상품 0.6%,반제품 42.0%,부품;부분품 40.0%,자본재 14.0%,소비재 3.3%)2005년 한국의 대 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54.7%로 전년대비 1.9%p 상승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35.8%로 동 2.3%p 하락했다.(대중 수입상품 구성(2005년):일차상품 9.4%,반제품 35.3%,부품;부분품 19.4%,자본재 18.5%,소비재 17.3%)

나. 수출 구조

2005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82%로 전년대비 2.3%p 상승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17.3%로 동 2.4%p 하락(대중 수출상품 구성(2005년) : 일차상품 0.6%, 반제품 42.0%, 부품·부분품 40.0%, 자본재 14.0%, 소비재3.3%)

<표3-2>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¹²⁾

(단 위 :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품 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차상품	0.5	0.5	0.4	0.4	0.5	0.5	0.6	0.6
중 간 재	88.8	80.4	84.9	83.4	76.1	76.5	79.7	82
반 제 품	84	72.8	65.2	64	52	46.2	43.9	42
부품 부분품	4.8	7.5	19.7	19.5	24.1	30.3	35.8	40
최 종 재	10.7	19.1	14.7	16.2	23.4	23	19.7	17.3
자 본 재	7.3	12.6	9.9	11.1	18.5	18.6	16.2	14
소 비 재	3.5	6.5	4.8	5.1	4.9	4.4	3.5	3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최종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3-3>

<표3-3> 한국의 교역대상국별 수출구조(2005년 기준)¹³⁾

(단 위 : %)

	대세계	중 국	대 만	ASEAN	일 본	미 국	EU
전 품 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차상품	0.4	0.6	0.5	0.4	1.1	0.1	0.1
중 간 재	57	82	79.7	74.7	66.4	43.4	28.1
반 제 품	30.2	42	31.3	44.7	43.8	20.8	10.2
부품 부분품	26.9	40	48.4	30	22.6	22.6	17.9
최 종 재	42.5	17.3	19.7	24.8	32.5	56.4	71.8
자 본 재	26.3	14	13.8	18.3	19.2	24.8	45.2
소 비 재	16.2	3.3	6	6.6	13.3	31.6	26.6
기 타	0	0	0	0	0	0.1	0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이용작성¹⁾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는 반제품에서 부품·부분품 중심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대중 부품·부분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전자통신제품 분야의 한국계 기업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현대자동차의 북경 공장(베이징현대)이 완성차 조립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부품(2002~)의 대중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국내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중국내 휴대폰, 하이테크 가전(LCD TV 및 PDP TV) 및 컴퓨터 등의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휴대폰 부품(2001~2004), 반도체(2002~), LCD(2001~), 모니터(2001~) 및 컴퓨터부품(2000~04), PDP 등 하이테크 전자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휴대폰은 완제품(2002~03년)수출에서 2004년 이후 부품 수출로 전환했다. 삼성수지, 철강판 등은 2003~04년 중국내 부족현상에 따른 과다 수입으로 잠시 급격히 증가한 후, 2005년에는 대중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최종재 수출에 있어서는 소비재 수출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자본재 비중도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본재 비중의 하락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율 둔화, 중국의 FDI유입 둔화에 따른 대한 투자용 설비 수입 감소에 기인 (중국의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2004년 32.9%에서 2005년에는 8.3%로 둔화)<표3-5>

<표3-4>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과 중국의 대한 투자용 설비 수입¹⁴⁾

(단 위 : 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중 기계류 수출	10.4	15.0	24.2	32.2	34.3
중국의 대한 투자용 설비수입	10.1	11.6	17.4	27.9	25.3

14) 기계류에는 일반기계, 산업기계, 정밀계측기기 포함 자료:한국무역협회

다. 수입 구조

2005년 한국의 대 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다음<표3-5>와 같이) 54.7%로 전년대비 1.9%p 상승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35.8%로 동 2.3%p하락하였다.

(대중 수입상품 구성(2005년):일차상품 9.4%,반제품 35.3%,부품 ; 부분품 19.4%,자본재18.5%,소비재17.3%)

<표3-5> 대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분포¹⁵⁾

(단 위 :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품 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차상품	37.1	14.2	16.1	12.9	12.6	12.5	9.1	9.4
중 간 재	50.3	64.4	50.3	48.9	48.2	48	52.8	54.7
반 제 품	48.6	58.8	34.4	32	31.4	29.9	34.2	35.3
부품·부분품	1.6	5.5	16	16.9	16.8	18.1	18.6	19.4
최 종 재	12.6	21.4	33.6	38.2	39.1	39.4	38.1	35.8
자 본 재	2.6	4	13.7	14.5	14.9	16.9	18.4	18.5
소 비 재	10	17.4	19.8	23.6	24.3	22.5	19.8	17.3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와 대중 의류 수입 증가율 둔화로 1차 상품과 소비재의 비중이 하락하였다. 또한 유연탄, 합금철 및 선철 의류(2003년 이후)의 대 중국 수입증가율도 둔화되었다.

한·중 간 전자·통신분야의 산업내 분업 확대,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역수입 등으로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대중 수입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진출 PC업체의 역수입 확대에 따른 2003년 이후 중국산 컴퓨터(노트북, Desk-top), 컴퓨터부품(1999~)수입 대폭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반도체(MTI831110), PCB 수입 급증되었다. 중국 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중국의 철강판(비합금 열연강판, 2003~)및 강재 수출 확대로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2004~2005)되 있다.

15) 자료 :KITA DB(www.kita.net)

라. 무역수지 구조

부품·부분품 대중 흑자(다음<표3-6>와 같이)는 전년대비 40.3% 증가, 자본재 흑자는 4.4%감소, 일차상품 적자35.6% 증가하였고 대중 무역수지(2005년) : 일차상품 -32억 달러, 중간재 +296억 달러(반제품 + 124억 달러, 부품·부분품 +173억 달러), 최종재-31억 달러 (자본재+15억 달러, 소비재-46억 달러).

<표3-6> 가공단계별 대 중국 무역수지¹⁶⁾

(단 위 : 백만 달러)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품 목	-1,072	1,734	5,654	4,888	6,354	13,201	20,178	23,267
일차상품	-1,369	-1,000	-1,987	-1,647	-2,076	-2,564	-2,395	-3,248
중 간 재	482	2,575	9,225	8,666	9,680	16,346	24,055	29,635
반 제 품	416	2,297	7,628	7,375	6,888	9,656	11,750	12,365
부품 부분품	66	279	1,597	1,291	2,792	6,690	12,305	17,270
최 종 재	-184	161	-1,581	-2,124	-1,245	-576	-1,472	-3,108
자 본 재	97	856	63	91	1,810	2,816	2,627	1,514
소 비 재	-281	-695	-1,644	-2,215	-3,055	-3,391	-4,100	-4,622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광학기각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합성수지 부문에서 대중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에는 통신기기부품, 철강 교역부문에서 대중 적자로 전환되었다.

16) 자료 :KITA DB(www.kita.net)

<표3-7>주요 중간재 품목별 대중국 무역 수치¹⁷⁾

(단위 : 백만 달러)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섬유	-258	216	776	802	711	795	781	673
석유제품 코크스	-17	193	1,504	1,341	777	1,415	2,374	2,817
화학원료	21	453	1,531	1,387	1,858	2,562	3,993	4,905
화학섬유	-20	280	628	455	462	571	595	555
고무	-4	31	76	83	53	107	127	226
플라스틱	300	1,145	1,757	1,788	1,924	2,343	3,345	4,023
비금속 광물	-21	-85	-14	-88	-364	-409	-546	-710
철강	584	-586	410	786	894	1,800	640	-706
비철금속	-6	-63	-17	-56	-145	-86	-213	-112
일반산업 기계부품	-5	15	93	111	120	310	339	462
특수목적 기계부품	5	93	116	68	91	199	331	305
자동차 부품	-3	18	48	48	125	837	1,602	2,462
전기기기 장비부품	10	58	24	20	-55	-137	-138	31
전자 통신부품	106	182	1,358	1,135	2,584	5,166	8,565	10,603
통신기기 부품	37	50	33	38	23	20	2	-19
컴퓨터 부품	2	-24	50	31	395	1,485	2,471	985
반도체	54	93	997	749	1,077	1,442	2,470	5,309
음향기기 부품	7	38	196	243	267	333	335	437
기타전자 부품	5	24	83	74	823	1,886	3,287	3,892
정밀광학 기기부품	-9	-7	20	22	41	395	1,851	3,999
총 합 계	482	2,575	9,225	8,666	9,680	16,346	24,055	29,635

최종재에 있어서는 운송기기,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중국에 대한 적자 유지 및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7) 자료:KITA DB(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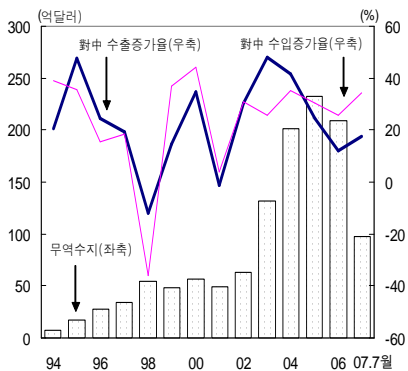
마. 한국의 대중 수출입 구조 변화

(1) 대중 무역흑자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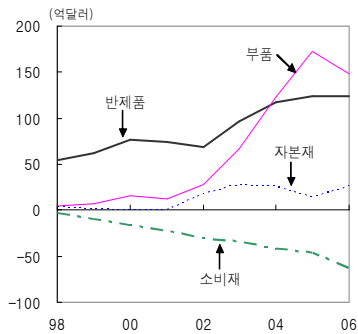
2002년부터 빠르게 확대되어 오던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는 2006년 흑자폭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어 2007년 1~7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8.9% 감소하였다. 이는 對中 수입이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對中 수출증가율이 10%대로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가공단계별로는 자본재 및 반제품의 흑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소비재의 적자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3-8>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

(수출입 및 전체 무역수지)18)



(가공단계별 무역수지)19)



(2) 반제품·자본재 수출비중 감소

수출구조면에서는 중국의 기술진보 및 반제품 수입대체를 반영하여 자본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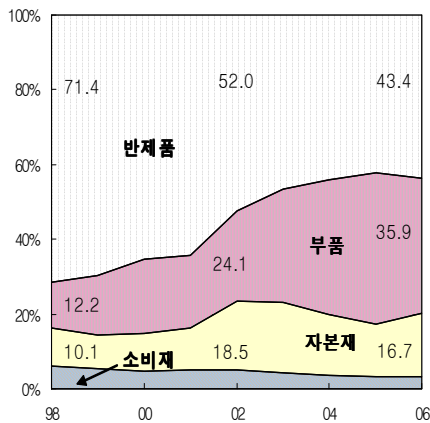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19) 자료 : UNComtrade data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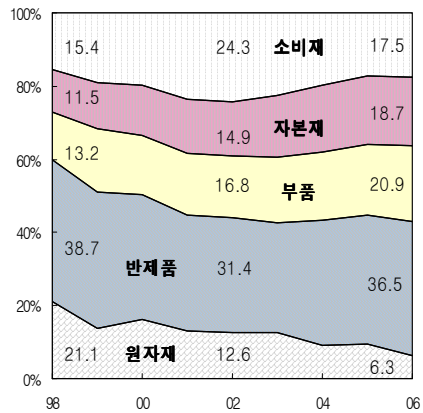
비중(다음<표3-9>와 같이)이 하락하고 있으며 반제품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부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전체 중간재 수출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컴퓨터·부품, 휴대폰 부품 등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의 의존도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對中 수입(다음<표3-10>과 같이)은 소비재 비중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재와 반제품, 부품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표3-9>가공단계별 대중 수출비중 추이



<표3-10>가공단계별 대중 수입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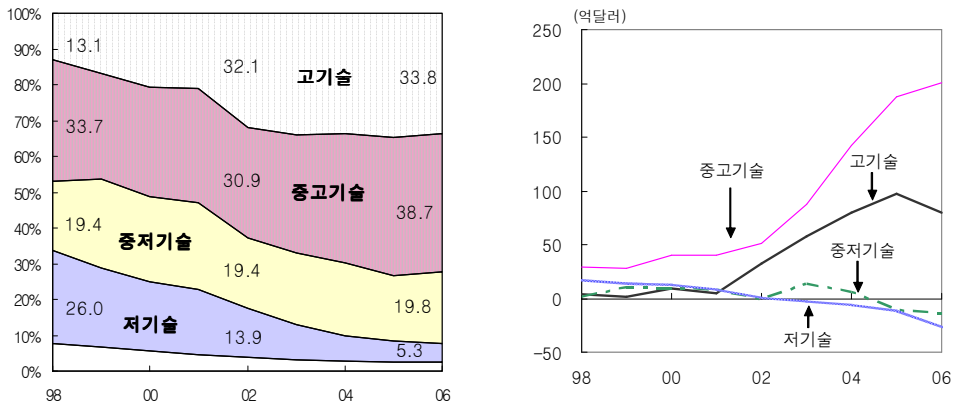


자료 : UNComtrade data base

(3) 고기술 제품 수출비중 상승

한국의 대중 수출(다음<표3-11>과 같이)은 高技術 및 中高技術 제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低技術 제품 비중은 감소하고 무역수지 면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의 흑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특히(다음<표3-12>와 같이) 對中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부품의 경우 수출은 통신기기, 반도체 등 고기술 제품이, 수입은 가전제품부품 등 범용부품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반면 저기술 제품의 경우 수출비중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었다.

<표3-11> 기술수준별 수출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표3-12> 주요 고기술 제품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²⁰⁾

(단 위 : 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고기술 제품	5.3	32.7	58.0	79.2	97.7	79.9
(전자부품)	4.7	5.3	7.1	18.3	48.1	34.4
(컴퓨터 및 사무기기)	-1.9	8.3	23.0	32.8	20.8	17.9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2.8	19.7	28.5	28.9	29.6	28.5
■ 중고기술 제품	40.3	51.4	87.3	142.5	187.1	200.3
(화학제품)	29.9	35.7	46.8	71.5	86.1	96.3
(정밀기기)	-1.3	-1.5	2.9	19.4	44.0	48.5

20) 자료 : UNComtrade data base

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둔화

그간 계속 상승하던 수출의존도(다음<표3-13>과 같이)가 2006년 21.3%로 최초로 둔화되는 등 수출선 다변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對美 및 對日 수출의존도는 하락세 지속하고 있다.

<표3-13> 한국의 나라별 수출의존도²¹⁾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수출의존도 (%)	對中	10.7	12.1	14.6	18.1	19.6	21.8	21.3
	對美	21.8	20.7	20.2	17.7	16.9	14.5	13.3
	對日	11.9	11.0	9.3	8.9	8.5	8.4	8.2

이는(다음<표3-14>와 같이)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등 중국 리스크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현하는 것이다. 對中 직접투자 비중이 2006년 크게 하락한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등 아시아 및 동유럽 신흥 시장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3-14> 한국의 국가별 대외직접투자액 추이(실행 기준)²²⁾

(단 위 : 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중 국	6.5 (12.6)	10.4 (28.0)	16.9 (41.3)	23.1 (38.8)	26.6 (40.5)	33.4 (31.0)
■ 베트남	0.6	1.5	1.5	1.3	2.7	5.9
■ 싱가포르	0.4	0.6	2.3	1.6	1.2	3.0
■ 캄보디아	0.1	0.0	0.1	0.1	0.3	1.2
■ 슬로바키아	0.0	0.0	0.0	0.8	2.2	2.9
■ 카자흐스탄	0.0	0.0	0.1	0.2	0.3	2.5
전 체	51.7	37.1	40.9	59.5	65.6	107.7

21) 자료 : 일본 환태평양비즈니스정보(RI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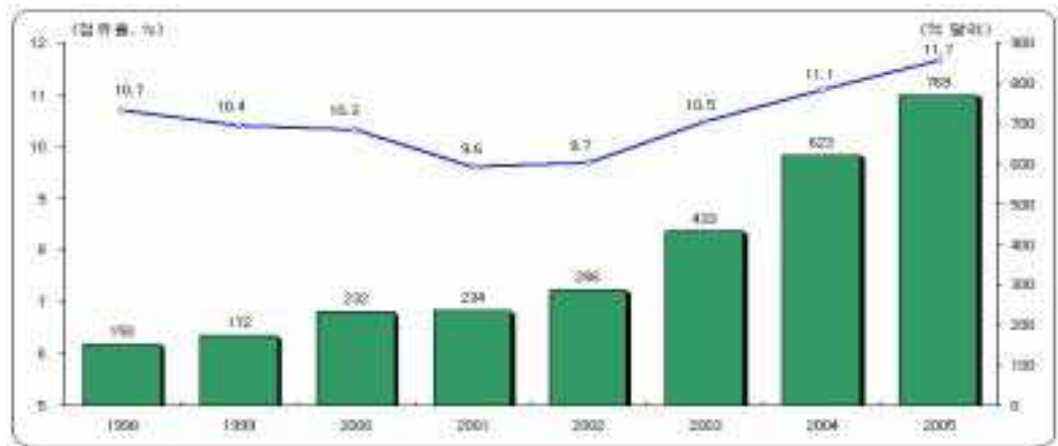
22) ()내는 직접투자액 중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 2 절 한·중 수입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분석

1.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분석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다음<표3-15>와 같이)은 2002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1.7%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다. 2005년 중국의 對韓 수입액은 7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다.

<표3-15> 중국의 對韓 수입액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²³⁾



(다음<표3-16>와 같이)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ASEAN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3) 자료 : 中國海關統計(KIAT db; www.kita.net)

<표3-16> 주요 국/지역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²⁴⁾

국가/지역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	10.7	10.3	9.6	9.7	10.5	11.1	11.7
일본	20.2	18.4	17.6	18.1	18	16.8	15.3
미국	12.2	10	10.8	9.3	8.2	8	7.4
대만	11.9	11.3	11.2	12.9	12	11.5	11.3
ASEAN	9	9.9	9.6	10.6	11.5	11.2	11.4
EU	14.9	13.9	14.9	13.3	13.2	12.5	11.1
중국	2.2	3.2	3.6	5.1	6.1	6.9	8.4

가공단계별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다음<표 3-17>과 같이)은 2004년에 13.5%에서 2005년에 15.0%상승한 반면, 최종재 점유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 2005년 중국의 對韓 중간재 수입액 : 586.5억 달러(전년비 30.1% 증가)

※ 중국의 對韓 수입 중 중간재 비중 : (04년) 72.5%→ (05년) 76.3%

<표3-17> 가공단계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²⁵⁾
(백만 달러)

가공단계	대한 수입액			구성비(%)		시장점유율(%)		
	2004	2005	증감률(%)	2004	2005	2004	2005	
전품목	62,166	76,874	23.5	100	100	11.1	11.6	
일차상품	272	329	21	0.4	0.4	0.3	0.3	
중 간 재	소계	45,072	58,652	30.1	72.5	76.3	13.5	15
	반제품	25,397	29,807	17.4	40.9	38.8	14.6	15.2
	부품및부분품	19,675	28,845	46.6	31.6	37.5	12.3	14.8
최 종 재	소계	16,726	17,827	6.6	26.9	23.2	11.9	11.5
	자본재	15,316	16,075	5	24.6	20.9	12.9	12.5
	소비재	1,410	1,752	24.3	2.3	2.3	6.2	6.6

24) 중국은 중국산 산업의 역수입 자료 : 中國海關統計(KITA DB: www.kita.net)

25) 자료 : 中國海關統計(KITA DB: www.kita.net)

중국의 고위기술(하이테크) 업종과 중고위기술 업종 수입에서 한국산제품의 경쟁력(다음<표3-18>과 같이)은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업종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중국 하이테크 업종 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 : (04년) 14.1%→(05년) 15.2%이다.

<표3-18> 기술수준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의 시장점유율²⁶⁾

(백만 달러)

기술수준	對韓수입액				한국의 시장점유율(%)		
	2000	2004	2005	증감률(%)	2000	2004	2005
고위기술	5,346	28,328	37,769	33.3	8.4	14.1	15.2
중고위기술	4,765	13,775	16,673	21	8.9	10.2	11.6
중저위기술	9,490	16,544	18,955	14.6	18.6	15.8	15.8
저위기술	3,492	3,345	3,260	-2.5	12.4	7.8	7.1

업종별로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다음<표 3-19>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은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석유산업, 화학석유 업종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된 컴퓨터(중국내 한국계 기업의 생산 중단 등), 통신기기, 음향기기 등의 점유율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6) 주 : 공산품만을 포함 자료 : 中國海關統計(KITA DB; www.kita.net)

<표3-19> 한국산 제품의 중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 변화²⁷⁾

		시장점유율 변화(2000년→2005년)	
		강 화	약 화
경 쟁 력	비 교 우 위	플라스틱,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설비, 정밀계측기기, 고무제품.	화학성유, 반도체, 음향기기, 섬유, 금속제품, 가정제품, 컴퓨터
	비 교 열 위	화학원료, 일반기계, 특수산업기계, 목재·죽·등제품, 종이, 문교·체육용품, 기타 전기기기·부품, 기타 전자기기·부품	의류·섬유제품, 식품, 의약품, 가족·모피제품, 가구, 석유제품,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우주항공, 기타 운송장비

<표3-20> 제조업 업종별 중국의 對韓 수입과 한국산 시장점유율²⁸⁾

(단위: 백만 달러)

업종	對韓 수입액				한국산 시장점유율(%)		
	2000	2004	2005	증감률(%)	2000	2004	2005
제조업	23,085	61,901	76,591	23.7	11.9	12.8	13.8
가공농부산물	14	15	14	-4.3	0.6	0.3	0.3
식품	29	58	75	28.7	6	5	6.3
음료	2	6	9	36.2	1	2.4	2.1
담배	0	4	3	-16.5	0	1.3	0.8
섬유	1,332	1,522	1,592	4.6	15.6	13.4	13.3
의류및신발	105	131	124	-4.9	11	12.5	11.6
가족·모피	938	668	623	-6.9	34.9	17	14.8
목재	66	39	15	-63	3.2	1.7	0.6
가구	5	47	63	34.2	2.9	9.3	11.6
종이	771	543	448	-17.4	11.6	5.5	4.2
인쇄·기록매체	24	16	19	17.5	7.4	4.4	4.5
문교·체육용품	35	52	47	-8.4	10.5	7.9	6.1

27) 주:경쟁력은 2005년 현재 기준 무역수지기여도(CTS)지수가 0보다 큰 경우 비교우위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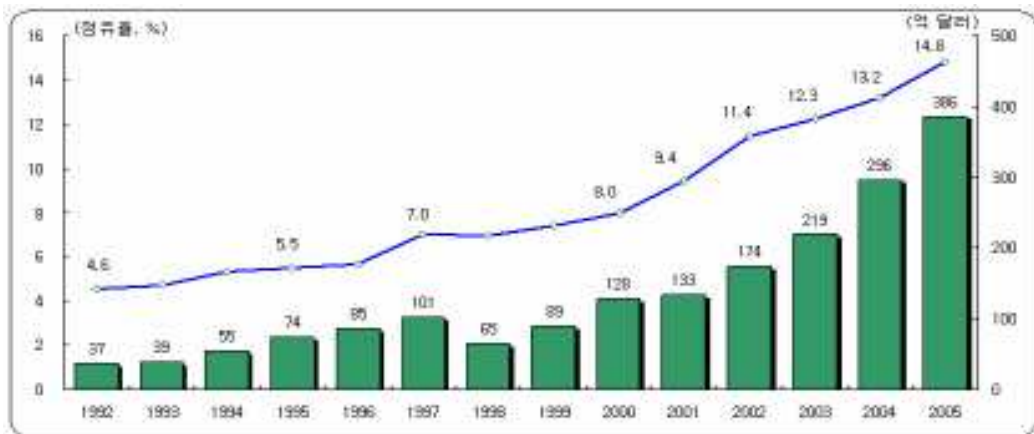
28) 자료: 中國海關統計(KITA DB; www.kita.net)

석유제품·코크스	2,016	3,186	3,513	10.3	35.6	24.4	23.8
화학원료및제품	2,641	5,932	7,799	31.5	15.3	14.4	16
의약품	9	12	14	18.2	1.1	0.8	0.7
화학섬유	1,731	1,327	1,239	-6.6	25.6	18.4	17.6
고무	172	361	549	52	13	11.1	14.6
플라스틱	2,632	4,875	5,860	20.2	18.2	17.4	17.6
비금속광물	171	307	263	-14.4	9.6	9.5	7.8
철강	1,966	4,671	5,170	10.7	17.5	16.5	16.2
비철금속	694	1,492	2,011	34.8	8.1	8.2	9
금속제품	100	247	310	25.4	13.2	12.1	12.6
일반기계산업	708	2,345	2,581	10.1	6.7	8.4	8.5
특수목적기계	664	2,226	1,963	-11.8	5.2	6.9	6.7
교통운송기기	125	1,587	2,138	34.7	2	8.1	10.7
자동차	112	1,508	2,095	38.9	3.3	11.7	17.4
조선	7	73	37	-49.8	2	7	7.5
우주항공	4	0	0	-52.7	0.2	0	0
전기기기·장비	461	1,547	1,986	28.3	6	8.6	9.8
가전기기	38	127	173	36.6	4	6.2	8
전자통신	5,303	19,799	27,097	36.9	9.3	12.1	13.5
통신기기및설비	202	1,100	701	-36.2	3.2	15.9	10.7
컴퓨터	574	2,137	2,545	19.1	5.8	7.6	7.6
반도체	3,081	10,226	16,077	57.2	14.6	13.8	16.9
전자부품	527	4,021	5,425	34.9	7.3	17.6	18.6
음향기기	458	600	616	2.7	15.7	8.7	7.2
기타전자통신제	460	1,714	1,733	1.1	4.9	7	6.5
정밀기기	210	8,743	10,910	24.8	3.8	26.6	25.7
공예품및기타제조업	164	142	156	9.7	10.6	4.2	3.7

2.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분석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다음<표3-21>과 같이)2001년 이후 빠른 상승세를 유지, 2005년에는 14.8%로 전년대비 1.6%p 상승하였고 2005년 한국의 對韓 수입액은 3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0.6% 증가한 것이다.

<표3-21> 한국의 對中 수입액과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²⁹⁾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만 상승하고, 주요 교역국의 점유율은 하락세 유지하고 있음을 <표3-22>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3-22> 주요 국/지역별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³⁰⁾

(단위: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4.6	5.5	8	9.4	11.4	12.3	13.2	14.8
일본	23.8	24.1	19.8	18.9	19.6	20.3	20.6	18.5
미국	22.4	22.5	18.2	15.9	15.1	13.9	12.8	11.7
ASEAN	8.7	7.5	11.3	11.3	11	10.3	10	10
EU	12.8	13.5	9.8	10.6	11.2	10.8	10.8	10.4
기타	27.8	26.9	32.8	34	31.6	32.4	32.7	34.5

가공단계별로는 중국산의 시장점유율(다음<표3-23>과 같이)은 중간재, 최종재 모두 시장점유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반면, 2005년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 자료 : KIAT DB(www.kita.net)

30) 자료: KITA DB (www.kita.net)

<표3-23> 가공단계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³¹⁾

가공단계		對中수입액(달러)				중국산점유율(%)			
		1995	2000	2004	2005	1995	2000	2004	2005
전품목		74	128	295.8	386.5	5.5	8	13.2	14.8
일차상품		10.5	20.6	26.8	36.3	4.4	5.6	5.6	5.7
중 간 재	소계	47.6	64.4	156.2	211.6	6.5	7.3	12.7	15.4
	반제품	43.5	44	101	136.5	9	8.9	13.2	15.7
	부품·부분품	4.1	20.4	55.1	75	1.6	5.3	11.9	14.9
최 종 재	소계	15.9	43	112.8	138.5	4.4	12.1	21.2	22.8
	자본재	3	17.6	54.3	71.5	1.1	7	15.5	18.1
	소비재	12.9	25.4	58.4	67	15.7	24.4	32.6	31.8

중간재 수입시장에서는(다음<표3-24>와 같이)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미국과 EU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을 표3-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3-24> 주요 교역국의 가공단계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 변화³²⁾

가공단계		일본		미국		대만		아세안		EU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중 간 재	소계	24.7	24.2	13.4	12.7	4.8	4.7	11.6	11.8	11.4	10.7
	반제품	23.2	23.7	9.3	9	1.8	1.9	10.6	10.6	10.6	9.5
	부품·부분품	27.2	25	20.2	19.2	9.8	9.4	13.2	13.9	12.6	12.6
최 종 재	소계	27.6	23.4	15.2	16.1	2.6	2.6	7.1	7.1	18.1	19.7
	자본재	35.7	29.9	16.8	18.6	2.7	2.4	6.5	6.6	17	19
	소비재	11.9	11.3	12	11.4	2.3	3	8.3	7.9	20.2	21

고위기술(하이테크),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업종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업종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저위기술 업종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3-25참조>

31) 자료 : KITA DB (www.kita.net)

32) 자료 : KITA DB (www.kita.net)

<표3-25> 기술수준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의 시장점유율³³⁾

	대중수입액(억달러)				중국의점유율(%)			
	1995	2000	2004	2005	1995	2000	2004	2005
고위기술	5.8	29.9	84.3	112.8	2.1	6.3	14.4	17.3
중고위기술	8.3	19.3	49	64.9	2.2	6.2	10.7	12.5
중저위기술	28.6	26.3	70.7	98.4	10	8.8	13.7	16.1
저위기술	26.2	36.2	75.5	88.4	8.2	8.1	12.8	12.0

업종별로는(다음<표3-26>과 같이)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강화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중국산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제품에서도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음료, 의약품, 석유제품의 경우에만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26>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변화³⁴⁾

		시장점유율 (2000년 → 2005년)	
		상승	하락
경쟁력	비교우위	가공농산물, 식품, 담배, 섬유 의류·신발, 가죽·모피, 목재·가구, 문교·체육용품,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가전제품, 방송통신기기·설비, 컴퓨터, 소자·인쇄회로, 음향기기, 기타전자부품,	음료, 의약품
	비교열위	종이, 화학원료,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 일반기계, 산업기계, 자동차, 직접회로, 계측·광학기기	석유제품

33) 자료 : KITA DB (www.kita.net)

34) 경쟁력은 2005년 무역수지기여도(CTS)지수가 0보다 큰 경우 비교우위로 판단.

3. 시사점

중국의 부상,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확대에 따른 산업내분업의 활성화가 한·중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한·중 교역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산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한·중간 무역불균형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27> 제조업 업종별 한국의 對中 수입과 중국산 시장점유율³⁵⁾

(백만 달러)

	對中수입액				중국산점유율(%)			
	1995	2000	2004	2005	1995	2000	2004	2005
제조업	6,123	10,149	25,844	33,954	5.5	8.2	14.6	17.2
가공농부산물	166	159	285	331	9.8	11.5	12.8	13.9
식품	62	102	261	345	5.8	9.7	17.1	19.2
음료	9	18	10	25	4.2	5.9	2.5	5.2
담배	0	0	16	17	0	0	7.8	10.7
섬유	771	879	1,570	1,712	31.3	37.8	50.3	53.1
의류및신발	244	594	1,401	1,597	35.7	67.5	78.6	78.7
가죽,모피	309	280	647	739	22.5	29.1	46.9	48.7
목재	83	151	245	286	5.6	15.8	22.5	24.3
가구	11	29	298	518	4.6	12.9	52.4	62
종이	16	49	86	147	0.6	2.1	3.5	5.8
인쇄,기록매체	1	3	17	24	0.9	1.7	7.5	9.6
문교,체육용품	54	98	268	257	7.6	18.3	32.3	28.6
석유제품,코크스	286	350	421	548	4.7	3.3	2.6	2.8
화학원료및제품	538	754	1,616	2,110	4.8	6.6	9.8	10.9
의약품	17	11	27	31	4.7	2	1.9	1.9
화학섬유	778	546	442	503	34.1	33	32	36
고무	16	61	137	197	2.6	10.1	14.7	18.1
플라스틱	67	100	346	491	2.7	3.7	7.9	9.1

35) 자료 : KITA DB (www.kita.net)

비금속광물	119	157	824	985	8.4	11.4	29.6	30.1
철강	1,321	912	3,181	4,909	15.9	12.6	19.9	26
비철금속	239	418	1,448	1,741	4.5	8.4	17.6	18.4
금속제품	27	51	155	203	4.7	10.3	21	24
일반기계산업	46	165	574	845	0.5	2.8	6.1	8.2
특수목적기계	19	39	143	265	0.2	0.5	1.6	2.6
교통운송기기	20	77	208	467	0.3	2.5	3.7	6.9
자동차	2	25	50	138	0.1	1.7	1.5	3.6
조선	1	10	55	187	0.1	5.3	5.4	16.4
전기기기?장비	177	714	2,145	2,671	4.2	16.3	33.8	37.7
가전기기	18	66	239	360	1.2	7.7	18.8	25.2
전자통신	529	2,853	8,042	10,768	2.4	6.7	15.9	19.3
통신기기및설비	13	139	345	465	0.9	4.2	19.8	20.8
컴퓨터	92	818	2,320	3,452	3.9	11.1	41.5	50.9
반도체	58	776	1,508	1,838	0.6	3.8	6.5	7.7
음향기기	203	380	1,036	1,147	16.7	23.2	35.4	35.7

한·중간 교역이 하이테크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교역에서 우위적 입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산업의 핵심부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중FTA 및 양국간 산업협력 Dialogue체제의 구축 필요하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의 추격과 중국산에 의해 수입대체에 대비하고, 기계류 분야의 對中 수출 마케팅 강화 필요하며, 석유산업은 아세안 및 중동산 제품에 의해, 화학석유는 아세안 및 중국산 역수입 제품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급격한 시장침투가 국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중국산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의 강화,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제 3 절 한·중 간 무역의 급성장 원인 분석

1. 1992-2006년 한·중 무역액

1992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첫해 양국 간 무역액은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343억 달러(증가폭 17배)로 급증했으며, 15년간 양국 무역액의

연간 증가폭은 27%에 달했다. 동기간 중국과 아세안(ASEAN), 미국, 일본 간의 무역액 증가폭은 각각 23%, 21%, 21%, 16%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3위 무역 대상국이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지역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입무역이 적자 기조에서 수익기조로 돌아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투자분야에서, 한국은 홍콩과 영국령 버진(Virgin)군도의 뒤를 이어 중국의 3위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지역이 되었다. 2006년 4월 현재, 중국이 실제 이용한 한국계 투자금은 277억 달러이며, 중국이 유치한 전체 FDI에서 한자(韓資)의 비중은 1992년 1.1%에서 10%로 상승했다. 대다수 재중 한국투자기업의 경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투자 수익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기업 중 60%가 대중국 투자경영 상황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중국을 향후 한동안 해외투자최우선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한·중 무역의 빠른 발전은 양국 경제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이 중국에 판매한 휴대폰 물량은 3,300만대로 동기간 중국의 휴대폰 수입량의 62%를 차지했다. 한편 2006년 한국은 중국에 3만5,000대의 자동차와 370만톤의 플라스틱(PVC)을 수출했으며, 이는 각각 중국의 동종제품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다. 2006년 한국의 대 중국 강재수출량은 490만 톤으로 중국 강재 수입량의 17%를 차지했다. 이밖에 양국은 물류, 역무(役務), 건설시공, 금융, 과학기술, 관광여행, 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폭 넓은 협력을 전개했다. 2006년 한국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던 중계업무 중 400여만 TEU가 중국으로 이전됐는데, 이는 부산항 한해 물동량의 1/3에 상당하는 양이다.

2. 한·중 무역액 급증의 주요인

최근 십여년간 한·중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원인은 주로 양국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 보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제품 품목은 주로 기술 집약형 및 자본집약형 공업완제품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는 화공제품, 전자통신장비, 전기기계제품, 철강, 석유류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주로 미가공 제품이나 기술 집약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형 공업완제품이다. 원자

재, 농산물, 광산물, 방직의류, 피혁, 전자부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역시 전통적인 항목(제조업 등)위주에서 첨단기술항목 및 R&D센터로 전환되고 있으며, IT 및 서비스업의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한·중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거점도 기존의 환보하이(環渤海)지역에서 화동(華東)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대 화동지역 수출액은 대 중국 수출액의 35.5%를 차지했으며, 동 비율은 2006년 41.5%로 상승했다. 현재 상하이를 축으로 하는 창장(長江)삼각주는 한국의 최대 대 중국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급신장세를 보임은 양국이 경제구조 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은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은 두개 요소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지역우위가 비교적 크다.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은 각자가 부족한 희귀자원의 재빠른 이동배치 및 상호공급을 실현하여, 미국이나 유럽과 교역을 할 경우,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의 자원배치는 주로 상품무역에 국한돼 있지만, 중국의 고용정책 규제가 완화되면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인재유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재중 유학생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2006년 기준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4만 명에 달하며,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6,000명에 달했다.

둘째,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한·중 양국은 문화적 배경과 일부 기본적인 인식 면에서 동질감이 높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과 서적 등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 내 30여개의 TV 방송국에서 60여편의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으며, 이는 줄곧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한국 문화부는 자국 문화 상품의 10%를 중국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산업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한류와 경제파급 및 효과 분석’에 의하면, 한류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45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한류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33억 달러에 이른다. 한·중 양국의 문화적 동질감은 한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문화를 전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국시장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한·중 무역에 잠재한 최대 문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 간의 무역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중국 측의 무역 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93년부터 한국은 대 중국 수출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역 초기 12억 달러였던 대중 무역흑자규모는 2006년의 330억 달러로 늘어나 12년 만에 27배로 늘어났으며, 양국 간 무역총액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였다. 중국측의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중 양국 무역액에서 중국측의 무역적자는 누계 1,50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 중 하나이다.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양국 간에는 기술 수준의 차이를 기초로 한 상품교역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수직적인 분업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수출입 상품구조는 한·중 국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확대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에서 한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해도, 중국의 저부가가치 상품의 대량 수출을 통해 한국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량 수입 차액을 상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편 한국의 시장 개방 상황이 비교적 제한적이며,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중국산 비교우위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이밖에 한·중양국의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우위가 가장 큰 업종도 한국 내 시장 경쟁에서 강력한 경쟁대상자와의 맞대결이 벌어지면서 그 우위가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의 농산물시장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EU)등 국가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섬유시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우위를 가진 동남아 국가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산 섬유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내수시장은 한국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가 훨씬 방대하다. 한국의 화학공업 및 기계전자류 제품은 기타 국가의 동종제품에 비하여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다. 또한 중국은 수출무역 확대와 더불어 수입 수요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대에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 설립한 상당수의 자회사들은 모두 한국 내 모회사로부터 기계장비, 원자재와 중간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룹사내무역이 중국의 무역적자에 미친 영향은 2006년 미화 34억 달러에 달하였다. 업종분포로 보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액(FDI)중 대다수는 전자통신제품, 방직의류, 석유화학, 기계장비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대다수도 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00년~2006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66.7%였으며, 한국 대기업의 대 중국 투자액 규모는 중소기업 투자액의 2배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대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중무역에서 중국의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중투자는 본국으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지만, 이러한 투자 중 상당부분이 자원지향적 투자로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우위를 찾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긴 후 완제품을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이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대중 투자가 중국의 수출확대에 의한 외화소득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향후 한·중 무역의 발전추세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못한 성장단계이므로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한·중 양국이 경제무역 협력과 관련해 실시한 장기적 발전계획 연구에 의하면, 2010년에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500억 ~ 3,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GDP 연간 성장률을 7.3%로 할 경우, 2010년에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3조 달러, 연간 수입규모는 1조 달러를 넘는다. 향후 중국의 방대한 시장규모는 한·중양국의 무역발전에 중요한 엔진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많은 중국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에 한

국의 일방적인 대 중국 투자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 한·중 양국은 양방향 투자의 신규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중국측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중국의 대 한국 투자건수는 333여 건, 투자 실행액은 4,000 여 달러에 달했으며 투자영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차 성장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신규 단계의 개방과 협력의 중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80%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서비스무역이 양국의 상호 협력에 무한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한·중 양국은 에너지, 환경보호, 물류, 금융 및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우선 협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양국 협력에 관련해, 한·중 양국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수입국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양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이다. 한·중 양국과 인접한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수출국이다. 현 단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전 개발은 초기단계에 놓여 있지만, 한·중 양국의 주도 하에 에너지수출국, 에너지 수출경로국, 수입국 등 다각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한·중 및 러시아는 모두 득을 볼 수 있다.

제 4 장 한·중 교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 1 절 교역의 문제점

1. 원부자재 대중국 수출 감소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한국 투자진출 기업 및 여타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인 바,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한국 투자진출 업체도 과거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였으나 완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저가의 중국산 원부자재 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을 포함, 외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초기단계에서는 원부자재 수출증가를 초래하나 점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생산업체 경쟁력 상승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업체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중한국내에서 현지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서 한국산 수입 원부자재 사용이 감소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등을 계기로 고양된 국가 이미지를 앞세운 일류제품과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사용 중인 한국 투자 진출 업체의 중한국내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고품질 고부가 가치를 지닌 원부자재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국 농산물 수입 문제

주요 이슈로 거론된 중국 마늘 수입 문제에서와 같이 한국 내 농산물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측은 누계 330억 불을 초과하는 무역 불균형과 실업과 저소득에 직면하고 있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하여 한국 공산품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로 이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한국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WTO 규정의 연구와 중장기

적인 한국내 농업정책의 마련,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농민을 포함,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올 수 있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제 2 절 한·중교역의 활성화 방안

1. 다양한 마케팅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여 중국 시장을 13억 인구의 단일시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5개 이상 지역³⁶⁾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이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필요하다면 진출이 용이한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결과를 보아가면서 각각의 시장 진출에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할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서 소비를 하는 주체로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에 30%에 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10대나 20대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유행하는 한류(韓流)를 이용하고, ‘1가구1자녀 정책’³⁷⁾에 따라 첨단 유행상품의 구매 결정력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 등이 요구된다.

그밖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상품을 단시간 내에 중국기업이 모방, 저가 공략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 LG 화장품 등의 예에서와 같이 고유 브랜드 개발이 요구된다.

36) 동북3성(요녕·길림·흑룡강), 화북지역(산둥·북경), 화동지역(상해·강소·절강), 화남지역(광둥·복건), 서부지역 등.

37) 중국 정부는 79년 1월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유통 분야 관심 증대

9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계 까르푸, 미국계 월마트, 독일계 메트로 등 중국 주요 상업 도시에 진출한 대형 할인매장은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들 대형 매장을 활용하는 한편, 편의점, 할인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전문 할인 매장을 확보하여 유통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관심 증대조치가 필요하다.

중국 소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진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바, 세계 50대 유통업체 중 프랑스 까르푸, 미국 월마트, 홍콩 화룬(華潤) 등 35개사가 중국에 진출중이며, 이들 업체의 2001년도 중국 상품 조달액은 중국 총수출의 11.3%에 해당하는 300억 불에 달하고, 월마트, 까르푸 등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련화(聯華)슈퍼마켓은 오는 2008년까지 100억 위안(약 12억불)을 투자, 중국 전역에 8천개 슈퍼마켓 설치 계획을 발표, 외국계 유통업체와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3. 대 중국 무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

한국 상품 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천연섬유, 의류, 완구, 식품,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뿐만아니라, 철강, 가전, 오토바이,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 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절실하다. R&D 투자를 통한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및 구조전환 노력 확대 등 이다.

대중 원가절감형 투자보다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감안 ,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부대개발 관련, 중국은 중앙정부 재원의 약 70%를 투입할 예정인 바, 서부지역의 구매력 증대 예상된다.

(1) 서비스시장에의 진입 노력 확대

중국의 WTO가입이후에는 서비스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개방될 것이므로,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부문 등에서의 중국시장 진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2) 중국 시장 진입방식의 다양화

서비스부문 투자를 제외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 또는 직접투자방식외의 기술, 라이선싱, 서부대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 관련 M&A등 위험성이 작은 시장진입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4. 한·중 간 무역 확대

첫째,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의 수출과 내수시장을 동시에 진출하고 모색해야 한다. 아직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무역장벽이 많으나 WTO 가입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이므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단순 임가공 수출형에서 나아가 수출 및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거나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삼보컴퓨터 심양 공장의 경우 99년 투자 진출, 연 3억 불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한국산 비율은 60%에 달한다.

한국산보다 30% 저가품 생산이 가능하며, 이 제품은 미국 시장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나 빠른 속도로 확대중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계획해 두고 있다. 현재는 3억불 매출 중 5% 수준인 1천5백만 불 정도를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한국내 1천여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동기는 시장확보(37%)와 생산비용 절감(32%)이 많은 가운데 중국 및 아세안 경우 생산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으며, 판로는 현지판매 57%, 제3국 판매 22%, 대한민국 판매 12% 등이었고 한국 내 모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자금조달(48%)자본재 조달(66%), 부품 조달(57%)등에서 높았다.

중국 시장은 수입된 상급 완제품, 합작투자기업이 생산한 중급 제품, 저가의 중국 제품 등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합작 형태의 투자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LG,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소비재 중심 한국 대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는 관련 중소기업 후속 진출을 가져오며, 이들 업체에 대한 하청, 부품 공급 등은 원부자재 수출 증대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자동차 소나타 모델이 북경택시의 모델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베이징현대가 2002.11.18.정식 설립되었다. 중국 정부가 WTO가입 이후 처음으로 승인한 외국기업의 자동차 신규합작 투자이다. 중국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한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한 생산 공장의 합작 형태 진출은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으로 보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중소기업 진출 지원 문제이다.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과 사전 조사 불충분, 무계획성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국 내 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한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주요 투자 진출 지역에도 설치하여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창업까지 적절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경우 효과적인 중소기업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일 3국간 경제협약체 구성 가능성 검토이다. 한·중·일 3국은 양자간 교역에 있어서 상호 1~4위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즉, 한국은 중국의 4위, 일본의 3위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한국 및 일본의 2위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은 중국의 1위, 한국의 2위 교역 상대국이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대일본 무역적자가 약 101억 불, 일본은 대중국 적자가 3조엔(약 250억불), 중국은 대한국 적자가 49억 불(중국측 통계로는 108억불)로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가 엇물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보유, 문화적 유사성 등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3국간 역내 교역 비중이 20% 미만인 점, 한국 일본의 경우 민감한 중국 농산물 교역 문제와 그 밖의 중국-일본간의 상호 경계와 2차대전 당시의 좋지 않은 역사적 경험, 국민 정서상 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3국간 협정 체결은 향후 5~10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국간 FTA 추진이 제반 조건 미성숙으로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3국간 FTA 추진에 앞서 외환, 투자, 환경·에너지, IT 분야 협력 등 3국이 관여된 경제통상 분야의 현안사항과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사전 조율하는 등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협약체를 만들어 분야별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무역 분규 예방이다.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 농촌이 당면한 실업과 궁핍 등 중국 내부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최근의 마늘 분쟁과 유사한 무역 분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의한 조기의 문제 파악과 함께 중국측과의 사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한국 내적으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종합적인 농업 한국 내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 당국에 의한 반덤핑 남발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불공정 관행과 법적인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5. 투자 현황 및 동향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이다. 대중국 투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급성장을 하여 투자 잔액기준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20%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외환위기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며 그동안 최대 해외투자대상국이었던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이후 대중국 투자의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매우 빨라 국내 해외투자의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2002년에는 3.61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주요 투자국이었던 미국(2.45)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규모(GDP 또는 총고정투자)대비 투자액비중을 보았을 때도 2002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비중이 일본 등 다른 투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대중국 투자가 19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은 국내경제의 회복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중국의 WTO 가입 등 1999년 이후 중국의 개방 가속화정책과 국내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99년 이후 대중국 투자의 증가는 단순히 경기순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의 성격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투자 누계액에서도 2004년 이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2,300건에 33억불에 달하는 금액을 주국에 투자하고 있다.

<표4-1> 한·중 투자현황³⁸⁾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대중국 투자	금 액	6.38억불	10.27억불	16.66억불	22.98억불	26.46억불	33.09억불	169.8억불
	건 수	1,049건	1,385건	1,679건	2,142건	2,240건	2,300건	15,909건
대한국 투자	금 액	0.7억불	2.49억불	0.50억불	11.65억불	0.68억불	0.40억불	17.86억불
	건 수	812건	441건	522건	597건	672건	333건	5,225건

6. 대 중국 투자협력 강화

첫째, 중소기업 진출시 정부 지원 필요성이다. 대기업 경우 자체 우수한 인력과 정보망, 자금력 등을 보유하여 자력 진출이 가능하나, 특히 중소기업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 자금,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시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 KOTR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한국 정부 기관의 관심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양방향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진출 희망 기업이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대 중국 인식을 갖도록 지역별, 분야별 상세한 정보를 지속 공급하고,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발생시 해결에 노력하며, 대 중국 경쟁력을 지닌 고부

38) 출처 : 산자부, 한국수출입은행

가가치 산업으로 유도 및 미래의 유망한 투자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 등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포함하여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 해당부처가 KOTRA³⁹⁾,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기업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양국 정부간 경제·통상 협의 채널(약 40개)이용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진출과 애로사항 해결을 계속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 중 간 상호 보완적 협력 추진이다. 중국이 금융부실문제와 재정 적자 문제, 실업자 증가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연간 5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다면 연평균 800억 불 이상의 GDP 증가를 의미하는 2010년까지의 GDP배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⁰⁾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지속은 한국 기업에게는 중국 진출과 한국내 산업 구조 조정의 호기로서 중국의 산업별, 지역별 특성을 잘 활용하고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이며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경우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기업은 기술과 기업 경영 측면에서, 중국 기업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노동력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 기업 간의 협력체제 구축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천시 등의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계획과 같이 관광, 숙박, 여행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인 및 화교의 한국 관광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국 시장을 목표로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97년 이래 연평균 25억 불의 해외 투자를 하였으며, 향후 10년간 해외 투자 규모가 매년 100억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도 나온 바 있고, 지난 4월 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5차 회의에서 주룽지 총리는 중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유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넷째, 한국내 기업환경 개선 노력 지속이다. 한국내의 각종 규제, 노사분규, 비싼 부동산, 높은 물류비용 등 기업 환경이 한국 기업의 한국 내 투자 대신 해외

39) KOTRA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40)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최근 중국 경제가 2005년까지 연평균 7~8% 성장하고 그 후 5년간은 7% 전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는 95~2000년간에는 연평균 8.3%, 2001년에는 7.3%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와 물류비용 절감 노력 등 한국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 떠나는 한국 내 기업의 탈출 현상은 피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한국 내 요인으로 대 중국 투자 진출이 심화되어 일부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만, 일본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아직까지 한국경우는 심각하지 않은 단계이나 중·장기적으로 사전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경우 최근 전통적 제조업과 일부 IT산업의 대중국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로 일부 업종에서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문제화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대 북한 경험 지원 가능성이다. 앞으로 남북한 간 관계 개선 및 경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경의선 복원과 중국-북한 간 철도·도로의 확장·신설 등 인프라가 보완될 경우 북한에 인접한 동북3성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은 남북한 간 경험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 바, 향후 일부 산업 분야 경우 필요시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가령 공장 건설기간이 길거나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중간재 생산 분야 경우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한 투자기업은 북한에 대한 초기 경험 단계에서 공급의 원활화를 가져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향후 전망

1. 한·중 투자전망

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전망.

현재 중국은 순저축(순해외투자)이 정(+)이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대폭 수용하는 상황이다. 해외투자의 경우, 미국 재무부 채권 등에 투자되어 그 수익률이 낮는데 비해, 중국 내 유입되는 FDI는 기본적으로 주식출자(equity financing)이기때문에 예상수익률이 높다. 환언하면, FDI는 국내 자본축적을 위한 매우 “비싼” 재원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민간기업의 국영기업 지분 습득, 투자활동 자율화, 신용제약의 완화 등 보다 구조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국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조세정책이다. 그런데 중국의 외국기업 이윤에 대한 조세정책의 강화는 좀 더 장기적, 제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즉, 향후 중국의 자본계정 거래가 본격적으로 자유화되면 이전가격 조작 등 외국기업의 조세회피 노력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서 자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본계정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한 자본시장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남미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은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것으로 중국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은행부분의 구조조정이다. 은행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금융부분의 자율화가 지속될수록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FDI정책 변화를 보면 국제관행과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노사관계나 세무조사 등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관료의 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요컨대 WTO가입 등, 향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생산체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제도개혁(국영기업민영화, 환율자율화, 자본통제 완화, 금융시장 개혁 등)이 앞서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틀과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역할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최근의 정책변화는 보다 구조적인 정책변화의 전조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 전망

중국은 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23년간 연평균 8% 정도의 경제 성장으로 2000년에 GDP 규모가 1조불을 초과하였으며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 2001년 12월 WTO 가입,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 경기 유치 등을 계기로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 수년간 7~8%대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6년도에 10.48% GDP 성장, GDP 2조 6,415억불로 추계되었다. 대외무역 규모는 2006년 1조 7,600억불로, 수출 9,693억불, 수입 7,917억불로 무역흑자

가 1,775억불에 달하였다. 또한 세계 제1위 외환 보유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이며(2006년 12월말 현재 총 누계 14,479.6억불), 2006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0.8% 수준으로 예상되어 경제발전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는 일반적 통설도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다.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2~5년간의 WTO 규약 이행 유예기간을 거쳐 외국인에게 투자가 더욱 개방되고 고도성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 기업 중 제품 기술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수요확대가 지속되고 추가 개방되는 자동차,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고급가전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는 WTO 가입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반면, 투자기업 중 이미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중국 업체의 빠른 기술 습득으로 조만간 중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는 타격이 예상된다.

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시행

중국 국무원은 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을 경제 개혁과 산업 조정 추진 및 WTO 가입 이후 투자 지침 합리화를 위하여 폐지하고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 부여 및 심사 기준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 (국무원령 제346호)을 2002년 2월 26일 공포, 4월 1일자로 시행토록 하였다.

동 지도규정은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려 영역’으로 농업 신기술, 에너지, 교통, 신재료, 환경 분야 등을 규정하여 향후 중국의 중점 투자 유치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번 “외국인 투자 방향 지도 규정”의 발표로 특히 장려 산업 관련 업종 및 서비스업종 개방에 따른 은행, 보험, 증권, 관광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 중국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5년 잠정규정에는 포함된 ‘시장 수요에 적응하는 생산 및 수출업체의 투자’를 금번 규정에서 삭제함으로써 단순 가공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 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한국 기업의 투자 전망

가. ‘Think Local, Act Global’ 型 현지화 전략 추구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동안 경영행태 면에서 중국정부나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 및 국민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원하는 것은 선진기술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수준의 경영과 행태이다.

글로벌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노출(‘Think Global, Act Local’ 型)시켰고, 일부 기업들은 중국의 허술한 법제도나 정부의 비호에 편승하여 후진적인 경영행태를 보여왔다.⁴¹⁾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하며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글로벌 규칙에 맞는 투명·준법경영을 구현하고 적극적으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Act Global’ 실천이 통해 준법·투명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법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위법행위는 물론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편법행위도 경우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 있고, 지방정부의 특혜나 묵인은 더 이상 중국 사업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없음에 알아야 할 것이다.

서구기업이나 일본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세무 등 법·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외부컨설팅을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으나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서구기업이나 일본기업에 비해 준법경영이나 투명경영에 있어 취약점 존재한다.

41) 자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준법경영을 시행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이 중국 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의 네슬레 분유의 요오드 기준초과, 하겐다즈의 무허가 주방 위탁가공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에서 20% 정도가 이미 노사분규를 경험하였고, 대부분 향후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⁴²⁾된다.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현지법을 준수하는 한편 전문가를 육성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국 내수시장 목표 대규모 합작투자 증가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중국보다 고도 기술을 보유중인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중국과의 합작기업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LG화학, LG전자, 포스코, 삼성SDI, 기아자동차, 신세계 이마트등 대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또는 중국 시장 및 제3국 수출을 목표로 ABS(합성수지), PVC 창호, 스테인리스, 칼라강판, 형광표시판(VFD), 초박막 필름, 승용차 생산,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천만 불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시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VC, 냉연강판 등 중국 측의 반덤핑 조사 대상 산업 경우 중국 측과의 합작기업 설립은 반덤핑 판정 등 통상 압력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IT산업 진출 확대 전망

WTO 가입 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던 이동전화, Pager 및 VAN(인터넷 포함), 한국 내 국제전화 등 통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2~5년 이내 25~50%의 합작투자를 허용할 계획임에 따라 IT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10월말 현재 중국의 전화 가입자는 4억 명을 돌파, 이 가운데 휴대전화 가입자가 1억9천5백만 명, 유선전화 가입자가 2억 9백만 명이며, 인터넷 가입자는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IT 산업은 향후 20년간 8배 증가할 것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바, 동일 기간 중 GDP는 4배 증가, 전자·IT 산업분야는 8배 성장한다고 예측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의 향후 잠재력을 표

42) KOTRA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530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투자기업경영실태에 대한 결과(2005.8.23)

시한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전통적으로 1-3위의 주요수출품인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판을 제치고 휴대전화가 1위, 컴퓨터가 2위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라. 문화 콘텐츠 산업 진출 확대

영화, 음반, 온라인게임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경우도 중국의 WTO 가입,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와 韓流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를 이용한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경부터 한국 컴퓨터 게임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韓流의 분위기와 한국 게임의 정서가 중국인들과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기반으로 한국 업체가 합자기업, 지분 참여 형태로 진출을 시작하였다. 2000년도의 문화 산업 관련 중국의 소비 지출액이 약 100억불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6배인 약 600억불로 전망한다.

마. 중국의 저임금 이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한계 도달

현재 상당수 한국 기업은 새로운 중국 시장 진출이 아닌 기존의 한국내시장이나 제3국 시장 판매를 위하여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것을 한국내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국에는 이미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현지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 빠른 기술 습득의 속도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조기에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 디자인, 신소재, 마케팅, 기업 경영 know-how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저임금을 이용한 중국 진출 기업의 상당수가 조만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한국 내 사양 산업이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는 현지 중국 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앞으로는 저임금에 기반을 둔 단순 임·가공형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 IT 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자금력과 중국에 연고권을 지닌 싱가포르, 홍콩, 동남아 등의 화교자본과도 협력하여 한국-화교-중국 간 3자 합작투자 유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중국 현지화 추세 확대

보다 효율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생산뿐 아니라 경영, 금융, 마케팅, 광고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우수한 현지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한국 내 인력을 최소화시키는 현지화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천진에 진출한 한국 신발류 제조업체는 현지에서 R&D 부서를 신설하고 대학을 졸업한 중국 고급인력을 한국보다는 저임으로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한국 내에 있는 R&D 부서를 중국으로 완전 이전하여 운영비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GE 경우 7,000여명의 직원 중 미국인은 1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 측은 한국 기업도 미국이나 유럽국들과 같이 현지 중국인의 참여 비중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에 연구소를 설치, 현지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한국기업도 연구 인력이 풍부하고 한국 인력의 임금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우수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기업은 자본, 기술, 판매, 생산, 연구개발 순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자본 분야에서는 공동자금투자과 기술투자에 관심이 있고, 기술 분야에서는 컨설팅·특허제공, 협력 설계·생산, 라이선싱에서 협력 의사가 있으며, 판매 분야에서는 시장공동 진출, 마케팅 협정을, 그리고 생산 분야에서는 공동생산을, 그리고 연구개발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3. 대중국 무역 흑자에 기여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국산 생산 기계를 투입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원부자재의 상당량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의 ‘대 중국 투자의 수출입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진출 5,000여개 제조업 분야 현지 법인의 외형 매출이 2001년

경우 220억 불로 제3국 수출 100억 불, 현지 판매 84.9억 불, 대한민국 수출 36억 불로 조사되었고 현지 고용 창출은 91.9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동 보고서는 이들 현지 기업의 매입은 총 165억 불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7.2억 불, 현지 조달 67.1억 불,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1억불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제조업분야 투자 진출에 의한 무역흑자는 31.2억불로 2001년도 대 중국 무역 흑자 총액 48.9억불의 67%에 달해 대 중국 무역 흑자 상당 부분이 대 중국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해외 시장 확보

한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그로 인해 실업 증가를 가져왔다는 논리로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어차피 한국 내에서 폐업 위기에 이미 처한 경우로서 오히려 대 중국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사양 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한 것은 저렴한 중국의 임금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제3국에 수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지속케 한 것으로서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대규모 투자의 경우 연관 협력 업체의 동반 진출과 기술 보유 한국 내 노동력의 중국 취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 창출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내 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은 수십억 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중국 투자는 오히려 한국내의 원부자재 공급 업체의 해외 시장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도 중국시장 선점과 중국 측의 무역장벽 우회, 저렴한 생산 여건 활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한국 내 생산의 대체라고 하기 보다는 신규 시장의 확보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국에 의한 추월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저렴한 임금 등 원가 절감을 목표로 투자하여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할 경우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대 중국 경계론이 있으나 이는 일면

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술유출이 아닌 경우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만, 일본, 유럽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이므로 중국 진출 회피는 오히려 중국 시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기계 설비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해외 시장을 보다 장기간 확보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투자 기업의 대 중국 기술 이전은 필연적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제3국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제3국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며 제3국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AV가전, 일부 디지털 가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중국 투자로 이미 중국이 세계 1위 생산 공급국이 되었다. 저임금에 의한 저가, 물량 공세를 주로 하였던 중국기업이 수년간 노력 끝에 가정용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것과 같이 중국은 이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6.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전망

가. 한·중 FTA 논의 경과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민감 분야 도출 및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민간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연말에 제출될 것으로 보임.

2006년 11월 17일에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실라이(Bo Xilai) 중국 상무부장이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2007년 1년 동안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 FTA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산·관·학 연구는 사실상 FTA 예비협상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초 공동연구의 결과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중간에는 중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일방적 대중 무역흑자는 양국 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나. 한·중 FTA 전망

(1) 경제적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추진 시 17조 9천억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되고, 제조업 분야는 26억 불의 무역흑자 확대가 예상되고, 농림수산물의 경우 90% 관세감축을 가정하면 수입액이 2004년 현재 21억 불에서 약 123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한·중 FTA에 따른 수입 증가액은 100억 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³⁾

· 단기적 영향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단기적 효과는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비용 즉 생활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무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값싼 중국

43) 2004년KIEP 연구결과, 외교통상부 농산품은 90% 관세감축 여타품목은관세완전철폐 및 자본축적가정

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되고 또한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장기적 영향

한·중 FTA의 장기적인 동태적 효과는 양국이 FTA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고, 한·중 FTA시 단기적인 무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와 달리, 중국이 투자·서비스 등의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이외에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 학습·혁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단기적 무역효과로 인한 호황으로 한국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격차 해소(catch-up)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한국산 재화 및 투자 확대에 의해 학습기회가 증가되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고, FTA로 한국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중국의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동태적 기술혁신 및 학습에 성공하면, 중국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catch-up 가속화 및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효과 삭감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정치·외교적 영향

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하고 특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해 왔다.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급격히 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중 FTA는 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신중한 자세 견지

한·중 FTA는 단기적 무역증진 효과, 중국시장에 대한 최우선의 접근성 확보, 양국 간 경제협력 제도화, 남북협력 및 북·중관계에 기여 및 지역내 FTA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하지만 한·중 FTA는 현재 중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체결 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대 등의 동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한국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 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단기적으로 한·중 FTA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동북공정 등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논란 및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중국의 FTA 추진 제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중 FTA는 한국이 반드시 체결해야 할 것이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기초로 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견지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 관련부처간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입장조율 및 국내적 여건조성 등의 준비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중 FTA 추진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한·중 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된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 절대치(absolute gain)는 확대될 것이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로부터의 서로의 상대적 이익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 추진 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체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 추진과 아울러 한국의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한·중 관계 15년 교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한·중 양국 간에는 지난 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경제 통상협력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어 무역 규모가 대폭 증가되었고,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FDI)도 크게 증가하였다.

대 중국 무역과 투자는 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일시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보다 다소 앞선 기술우위를 밑받침으로 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시장이 한국수출에 성장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건비 상승, 세제변화, 환율상승 등 다양한 중국경영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한·중간 교역확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역기반(수출입 업체 수)이 축소된 불안정한 성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 전체 실질 무역업체수 중 50%이상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고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2%에 육박하고 있어 시장다변화와 무역업계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신규 창업업체들이 대 중국 교역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수출보험과 바이어 발굴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 중국 교역과 투자 등에 대한 리크 관리에 힘쓰면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및 중국기업과의 산업 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기업과 다양한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고부가 및 고기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중 양국경제통상을 모색하고 교역·투자 등 문제점 및 무역을 더욱 상승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 번째는 다양한 마케팅활동이 필요하다. 중국 5개 이상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이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필요하다면 진출이 용이한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결과를 보아가면서 각각의 시장 진출에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할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등을 계기로 고양된 국가 이미지를 앞세운 일류제품과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사용 중인 한국 투자 진출 업체의 중한국내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고품질 고부가 가치를 지닌 원부자재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확대 대처방안이다. 중국 WTO 가입 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규제 수단을 적극 활용중인 바, 반덤핑 제소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소 가능성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추진에 있어 양국이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비교 우위를 살피는 등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한·중 FTA 추진시 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 삼국 FTA를 고려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 내 문 헌

1. 단행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비평사, 2002
이대근, 「한국무역론」 법문사, 2003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0
조현준, 「한·중 경제교유의 호가대와 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장준무, 김택중, 「근대한·중무역사」, 교문사, 2001

2. 논문 및 기타자료

- 김명식· 박예나,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6. 11
김봉기· 조한상,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한은조사연구 2003-7, 2003. 10
김성길, 「한·중 양국의 시장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3
김원준,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의 의 대외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김윤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9
김정남, 「한-중 경제협력의 평가 및 활성화방안」,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4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수출입상품 구조분석과 시사점」 2004. 10
「매일경제신문」, 2002.7.21.; 2002.12.12.
박미자, 「한·중교역과 대중국 투자에 대한 연구」, 배재대 석사논문, 2000
2005
박현정,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반연매, 「한·중 무역과 투자정책 및 통상마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3
산업연구원 「, 중국의 외자 우대정책 축소에 따른 5重苦대비해야」,

-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 1 3호, 2006. 10.
- 삼성경제연구소 「,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CEO Information 제562호, 2006.
- 심의섭, 「한·중간 보따리 무역의 추이와 발전방향」,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9호, 2006. 9
- 양평섭,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27호, 2007. 5
- 「연합통신」, 2003.1.21.
- 유혜진, 「한국 기업의 대중국 무역 거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윤동일,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중 무역발전방안」,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이문형,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화 전략” ,
KIET Issue Paper 2006-204, 2006. 12
- 이성우, 「중국의 외자유치와 노동정책 동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61호, 2006. 6.
- 장동명, 「21세기초의 중국경제 및 중한경제무역 관계전망」, 현대중국학회, 2004
「전자신문」, 2001.5.8.
- 「중앙일보 인터넷판 뉴스」, 2002.11.16.
- 탁세령 “,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진출관련 시사점” ,
「수은해외경제」, 2006년 6월호, 2006.
-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POSRI CEOReport, 2006. 8.
- 「한겨레신문」, 2001.6.4.
- 「한국경제신문」, 1998.7.1.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4.10
- 한국무역협회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2006. 4
- 한국무역협회 「한·중간 교역업체수 변화와 시사점」 2006.5
- 한국은행 “,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축소 배경과 전망” ,
「해외경제 포커스」, 제 2006 - 38호, 2006b.
- 한국은행 “, 중국 ‘적격외국인투자자(Q F I I)제도’ 의최근동향과 시사점”
「, 해외경제 포커스」, 제 2006 - 4 2호, 2006c.

외 국 문 헌

中國 《中國統計》雜誌,2004년

中國 《經濟日報》2001, 10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中國法制出版社,2002sia

向山英彦·佐野淳也, “中国における外資政策の変化と外資企業の対応”,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2007. vol. 7,
日本總研, 環太平洋戰略研究センター, 2007. 7

日本 經濟産業省, 「2005年版 通商白書 2005」, 2005. 7

Bird and Jun, “Earmarking in Theory and Korean Practice,” m i m e o ,2005 .
ChinaNewsletter, 각 월호

Cui, Li and Murtaza H. Syed, “Is China Changing Its Stripes? The Shifting
Structure of China's External Trade and Its Implications “,
IMF Working Paper, 2007. 4

Dunaway, Steven, Lamin Leigh, and Xiangming Li,
“How Robust are Estimates of 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s:
the Case of China “, IMF Working Paper, 2006

G. Gaulier, F. Lemoine, and D. Unal-Kesenci,
“China's Integration in East Asia : Production Sharings,
FDI & High-Tech Trade “, CEPPII, 2005. 6

Greene, Malory, Nora Dihel, Prezemyslaw Kowalski, and Douglas Lippoldt,
China's Trade and Growth : Impact on Selected OECD Countries “,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44, 2006. 11

Greenspan, Alan, Speech at the ExpoManagement, Mexico City on Wednesday 13 June 2007

HeatherSmith, 「TheEconomicDevelopmentofNortheastAsia」,Edward Elgar
Publishing,2001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2007. 4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various issues.

NewsWeek,ChinaInc.2001.9

Joseph C.H.Chai, 「The Economic DevelopmentofModern China」,Edward
ElgarPublishing,2001

King, Mervyn, Speech at the Great Hall, Winchester on Tuesday 10 October 2006

Rodrik, Dani,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

- NBER Working Paper, 2006. 1
- Schott, Peter, “The Relative Sophistication of Chinese Export “,
NBER Working Paper, 2006. 4
- Stiglitz, Joseph, “ The Future of China,” World Bank Group, Septembr, 1997 .
- Swenson, Deborah, “Multinationals and the Creation of Chinese Trade Linkages “,
IMF Working Paper, 2007. 4
- UNCA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 Wei. S “,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2000.
- Xie, Andy, “China Economics: Raising Wages, Not Currency “,
Morgan Stanley Research, 2006. 5
- Zebregs, Har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utput Growth in China ,”
mimeo, IMF, 2001.

웹사이트

- LG경제연구소 <http://www.legeri.com>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con.sericon.org/>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中國世界貿易組織研究會 <http://chinawto.org.cn>
- 中國商務部 <http://mofcom.gov.cn>
- 駐韓中國大使館 <http://www.chinaemb.or.kr/korean>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 역 학 과	학 번	2005780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왕 련 충	한문 王連忠	영문 WangLianzhong		
주 소	광주 동구 지산2동 232-21번지				
연락처	E-mail : wwd8332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중간 무역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rade and Development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08 년 2 월 일

저작자: 왕련충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